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못살겠다 심판하자’

더불어
민주당

4대비전 및 10대 핵심과제



10대 핵심과제

-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4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 5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6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 7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8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9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10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

4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삼시세끼가 매일 걱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로 지갑은 얇아지는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는 가족을 위한 과일 하나조차 사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텅빈 주머니를 채워줄 대책은커녕, 초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허울에 불과한 건전재정 기조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부권 행사로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무시해왔습니다. 검사독재도 모자라 압수수색 일상화와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상식과 사법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입틀막’으로 짓밟았고,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언론을 폭압으로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육아, 교육, 주거, 고용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복지의 안전망을 붕괴시키고 무한경쟁의 공포로 국민을 내몰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돌봄과 육아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흔들리고 있고 안보는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가치 외교’는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영업실패로 투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일상화된 위협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4대 비전

우리 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상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선도형경제와 저탄소경제로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소통과 타협,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가치외교와 튼튼하고 강한 국방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생회복

민생회복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건강과 안전,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중견·벤처·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근본으로 삼겠습니다.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미래희망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혁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극복에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희망

민주수호

민주수호

이념과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공존과 존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특권 내려놓기로 민의를 옹골게 반영하겠습니다.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평화복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능동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평화복원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022

- 01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02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03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하겠습니다.
- 04 먹튀·시세조종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05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06 맞춤형 금융·경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07 정부지원에도 여전히 비싼 교복, 불법행위 근절로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 08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09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10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11 전 국민 자산증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 12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을 확대하겠습니다.
- 13 공공건물과 폐교 등을 활용하여 대학(연합)기숙사 5만호를 확충하겠습니다.
- 14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15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16 이·통장의 노고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17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18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 19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 20.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고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21. 가슴기살균제피해자 치료 지원 끝까지 책임하겠습니다.
- 22.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 23. 중소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겠습니다.
- 24.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플랫폼 노동 최소보수 도입, 중간착취 근절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25.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26.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하겠습니다.
- 27. 2040세대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하겠습니다.
- 28. 6080세대의 안전한 내집 평생살기를 지원합니다.
- 29.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 30.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 등으로 건설중흥을 선도하겠습니다.
- 31.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를 절감하고, 혁신성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32. 민주당이 합니다! 철도지하화. 4가지 약속, 4가지 실천.
- 33. 택시운전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34. 반값전기차 공급으로 교통비 절감과 전기차 강국을 선도하겠습니다.
- 35.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외된 교통현장의 고통을 경청하겠습니다.
- 36.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37.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38.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66

- 0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 0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및 금리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 03 내수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04 소상공인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05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 06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 07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 08 대리점주, 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09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10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11 중소기업의 활로 지원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12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1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82

- 01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을 높ی겠습니다.
- 02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03 100세 시대, 청년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04 방과후학교를 무상화하고 질은 높이겠습니다.
- 05 아이 안전,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 06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 07 보육·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책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08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 09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10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11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12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보상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 13 워케이션 및 마을기업·청년마을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14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15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16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17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18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19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20 군 급식 조달체계 유지를 통해 어업인 피해 방지와 우리 군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21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 22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 23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로 노인질환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 24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25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 26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27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28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29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30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31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32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겠습니다.
- 33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삶 든든하게 받치겠습니다.
- 34 미래형 스마트 캠핑장을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해서 국민의 친환경 생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35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를 실현해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6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코로나팬데믹과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7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8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 39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40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41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4.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130

- 01 범죄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02 피해자 관점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국민 정보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04 사이버 보안 강국의 길을 구축하겠습니다.
- 0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0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어업인 피해 지원 및 국민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07 재외동포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08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 09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10 화재안전 장비 확대 및 최신 소방장비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11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12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전담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13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 의료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14 강남·광화문 지하철, 포항 지하철차장, 오송 지하철도 같은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15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녹조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4대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16 화학물질에 대한 꼼꼼한 정보 확보와 신속제공으로 국민이 일상생활과 작업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17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 폐기물 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를 단계적으로 퇴출해 국민 생활환경을 지키겠습니다.
- 18 붉은불개미 같은 침입외래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보안체계를 구축해서 동물매개 전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19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20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21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5.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158

- 01 정부연구개발(R&D) 예산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로 지속적 R&D 투자 담보하겠습니다.
- 02 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03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04 국가 대전환과 혁신성장을 이끌 젊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 05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06 중소·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07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08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09 ESG,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10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11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 12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13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14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해결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15 인공지능(AI)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Korea를 구축하겠습니다.
- 16 IT·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17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18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19 기술·지식재산 유동화 확대를 통해 다테크벤처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20 스마트공장 3.0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한 일터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1 무선급전트램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22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23 스타트업을 지역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겠습니다.
- 24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25 지역금융과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26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27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28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29 농식품산업을 스마트 미래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30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31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32 대체복무제도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을 유지하여 국적해기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33 수산 양식산업 · 종자산업 육성을 통해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34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35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습니다.
- 36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37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38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 39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40 지방 시정자들을 위한 지역 · 중소방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41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문화권을 확보하겠습니다.

6.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210

- 01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03 농림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04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05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열겠습니다.
- 06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07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08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 09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10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11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脫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 12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7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26

- 01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습니다.
- 02 자녀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03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을 도입하겠습니다.
- 04 다자녀가구의 주택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 05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06 10년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 07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가 무한책임하겠습니다.

8.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238

- 01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02 공공기관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높이겠습니다.
- 03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04 헌법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0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 07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막겠습니다.
- 08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 09 역사교과서에서 흉범도 장군을 지키겠습니다.

9.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48

- 01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바꾸겠습니다.
- 02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하겠습니다.
- 03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04 법조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 05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06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07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운영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08 정부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견제하겠습니다.
- 09 국유재산 졸속 매각을 막아 미래세대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 10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1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12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들겠습니다.

10.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264

- 0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 02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03 전쟁위기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04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하겠습니다.
- 05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06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07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마련을 위해 시험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별 주요공약

272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건강과 안전,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중견·벤처·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근본으로 삼겠습니다.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민생회복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4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민생
회복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01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고 있는 항목 제외

-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 면제

■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
-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 의무 안내

■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천만원 이하)

■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금융취약처주 지원 강화

02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보호

-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

■ 취약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 확대적용 등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사각지대 해소

■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지원

-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여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채무자 재기발판 마련

■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검토

- 일정금액 이하 채무(예: 3천만원)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03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하겠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
-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하여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예: 20%)하는 규제방안 도입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예: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
 - ※ 바이든정부는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결정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 강화

04 먹튀·시세조종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 CB·BW 발행계획 공시 후 가액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강화

-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 도입

■ 금융사기전담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악성 금융범죄에 신속대응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피해투자자 실질구제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및 벌금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피해자 손실배상 및 내부고발자 보상에 활용

05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
-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주주보호 강화
- 자사주 처분 시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하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늘리는 편법 근절
- 상장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여 무자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
- 상장회사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 사업보고서 또는 IR자료 등에 주주환원을 공시 유도
-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06 맞춤형 금융·경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 선생님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 확대

- 인증된 교육 콘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 금융교육 추진

- 대학진학, 출산, 퇴직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교육을 언제든지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07 정부지원에도 여전히 비싼 교복, 불법행위 근절로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 들러리 세우기 및 투찰 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 강화
- 교육부·공정위 공동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경쟁 상황 점검

■ 교복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 지원

- 교복 납품 독점화에 따른 미완성 교복(바지단 수선 등) 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입찰담합 발생 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 마련

■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 활성화

08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수행

■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준비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현행 50만원) 법정화 추진*
* '24년 기준 824,296원
-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중소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22년 기준 복원

청년만기수령액	본인(청년) 적립	기업 적립*	정부 적립
1,200만원	300만원 (본인부담)	300만원 지원 (기업기여금)*	600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0, (30~50인 미만) 20, (50~200인 미만) 50, (200인 이상) 100,
(기업자 부담 외 비용 고용보험기금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이직할 경우 계약 승계

■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연간 200만원 바우처 사용(최대 600만원 지원), 고교 졸업 이후 4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 비진학 청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

- 지자체·교육청이 운영 중인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내에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시민대학 개설(전문대, 폴리텍대, 방통대와 연계)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위탁·운영하는 인생설계학교(Gap Year)를 통한 국내외 여행,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 공공기관 직원 임금 분포를 알리오에 공시

- 청년 등 공공기관 구직자가 공공기관의 임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 분포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
 - 임금 분포는 성별 및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단시간 무기계약직(계약 일수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공시
 - 임금 분포 금액은 직원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을 최소 10여 개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의 직원 수를 공시

09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상향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인 기본공제금액을 연 2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연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10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월세 부담을 경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11 전 국민 자산증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천만원씩 납입 가능
-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예·적금 편입 불가)

12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을 확대하겠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폐지

-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이상은 제외
- 일반학자금 대출제도는 유지하여 가구별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 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 개편 통해 불공평 요소 개선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현행 5구간 이하 → 8구간 이하)

■ 대학원생 이용자격 확대

- 전문·특수대학원까지 포함하여 대학원생은 8구간까지 ICL 이용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

13 공공건물과 폐교 등을 활용하여 대학(연합)기숙사 5만호를 확충하겠습니다

■ 구도심 초·중등 폐교, 지자체 공공시설 활용 기숙사 건립 추진

- 폐교(이전) 또는 폐교예정 학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여 대학 연합 기숙사 리모델링 (건축·시설비용 절감)
- 교육청 활용 예정 또는 활용 중인 폐교 이용 시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신축하거나 교육청 활용 시설비 일부 국고 지원
- 운동장 부지 활용 대학기숙사 추가 신축, 인근 주민 위한 편의시설(공영주차장, 스터디카페,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설치

■ 국·공립대 부지 활용 행복 연합 기숙사 설치 활성화

-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합형 행복기숙사 적극 추진

■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연합기숙사 설치 포함

- 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공자기금 및 주택기금 예탁 행복기숙사 또는 민간 기부 방식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추진
- 기숙사 내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체육장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여 대학생·주민 공유

■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추진

14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청별 민원해결 전담팀 구성·운영

- 교육활동 관련 보호자 민원 학교장 1차 대응하되,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민원해결 전담팀 구성(장학사, 퇴직 교원 및 경찰관 등) 및 운영하여 자문·상담·중재 서비스 제공
 - ※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연계체제 구축
- 불합리한 악성민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및 법적 대응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문제행동 학생 분리 공간 및 지원인력 확보

-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하여 수업의 안정적 운영과 같은 반 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권 유지
- 학교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공간 마련 및 인력 추가 배치 위한 재정 지원
- 문제행동 학생 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보급하여 학생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시행

■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현장 안착 지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 실태조사,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개편, 교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교육부·교육청 지원 체제 점검
 - ※ 개정 교권보호 4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 교육부 및 교육청별 관련 예산 확보 상황 점검

15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추진

- 잔여 데이터 내 맘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

■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 위한 Whitespace(=TV 주파수 유휴대역) 활용을 통한 Super WiFi 구축 추진

■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1588·1577·1566·1544-) 전면 무료화 추진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16 이·통장의 노고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이·통장수당에 대한 국비보조
- 재난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 특별활동 수당 신설 및 국가지원
 - 산불, 수해, 전염병 확산 방지 등 특별활동 보조

17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 시 농가 피해 보전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을 강화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근로자제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 센터·지역 간 인력 정보 교류·연계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18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현재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 및 냉난방비에 불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점심급식에 필요한 부식(반찬) 및 취사 비용 확보

■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배치하여 조리 및 배식 지원

- 경로당 급식 및 청소 등 지원을 재정 일자리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지자체 조례 제·개정) 민주당 지자체부터 시작하여 전국 확대 추진

■ 경로당을 교육·건강·여가 등 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으로 육성

-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지능형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학습·활용 지원
- 맞춤형 여가·취미 프로그램, 보건소 연계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전자광고판 활용 생활정보 제공 등 지원

19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인력 임금 현실화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추진

- (1단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기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100% 달성 추진
- (2단계)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 도입. 동일 사회복지시설 간 지역별 임금 격차도 해소

■ 사회복지 거주시설 인력 3교대제 및 이용시설 인력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 사회복지시설 인력 추가 배치 및 지원 인력 확대
- 사회복지인력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

■ 사회복지인력의 안전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및 연수원 설치 추진

20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고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주도하에 지역별 중장기 아동·청소년·노인 복지시설 구조조정 및 확충 종합 계획 수립
 - 어린이집 등 과잉 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등 구조조정 계획 수립
 - 노인요양원 등 확충 필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기능 전환 수요조사를 통한 확충 계획 수립
- 기능 전환 희망 어린이집을 요양원 등 노인 복지시설이나 마을도서관·키즈카페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의 전환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 전환 희망 어린이집 파악
 - 지역별 아동·청소년 및 노인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희망 어린이집의 적정 기능 전환 유도
- 기능전환 비용 지원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어린이집 기능 전환 지원 법률'(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

21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치료 지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관련 치료전문시설 마련

- 국가 및 기업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로 유발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조정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 치료를 받도록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 차원에서 원진레이온 사고 관련 녹색병원 수준의 치료전문시설 설치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잔여 수명이 많이 남은 유아기 피해자들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

22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최소휴식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등에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 부여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장시간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화
- 사용자가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
-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 연차휴가 저축제도(예: 3년 이내 이월·적치)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제도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선
-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연차휴가 보장

23 중소기업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기업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 연장

-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점진적·단계적 법적 정년연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 중소기업기업부터 정년 연장 후 대기업·공공기관 확대
- 법시행 이전 60세 이상 고령자 정년연장이나 재취업 사업(장) 지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 가입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 100% 지원(~'30년 까지)
- 가입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 50인으로 확대

24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플랫폼 노동 최소 보수 도입, 중간착취 근절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 보장
-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관계법상 권리 노동시간 비례 보장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종사 공무원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무원위원회 법제화
- 최저임금의 산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 일원화

■ '정규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원칙 제도화
- 고용이력(해고과다, 비정규직고용과다 등)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폭 확대

■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에 비정규직 대표 참여·활동 보장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활성화 및 전담지원 기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 전국 확대
- 현행 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인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동노동복지기금 조성 지원

■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제도화

- 용역 등 하도급 근로관계에서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 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 명시 및 상한 설정 도입
-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제도화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 사용자에 입증책임 전환
-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추진
-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 추진

25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가게(입점업체)와 배달 생태계의 약자인 배달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체계 마련

- 표준계약서 법제화, 업계 특성에 맞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방통위 · 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제 정비

■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 추진

■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마련

- 친환경 포장재 개발 추진, 분리수거제도 개선 등 생활폐기물 대책 집행 강화
- 친환경 포장재 또는 다회용기 사용제도 도입 추진

26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주거복합플랫폼(도시형, 지방형) = 주거+상업+교육+문화+여가+일자리+의료 등 자족기능 갖춘

- 수도권(50만호)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 및 자족기능 겸비
- 지방특화형(40만호) : 지방특성에 맞는 ①건강돌봄서비스형 ②은퇴자복합타운형 ③학교 공동체형 ④귀농산어촌형 ⑤업무창업공간형 ⑥문화예술공동체형 등
- 어르신 복지주택(10만호) 공급 확대

※ 기본주택 :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분양·임대형) 공공주택

■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하여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 제공

-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확대
- 시설개선·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 공공임대 '입주민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 긴급 주거 제공 등을 통해 비주택 거주 완전한 해소

■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 도입

※ 유도주거기준 :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요율 상향으로 현실화 추진

■ 지방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자 허용 등 주거정책권한 대폭 지방이양

■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 작성 및 맞춤형 주거 공급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 산정근거 및 평가절차 투명한 공개

27 2040세대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가리지 않고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 지원

28 6080세대의 안전한 내집 평생살기를 지원합니다

■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재고량 30만호 확보 추진

■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 고령, 건강상 이유로 기존주택 공실 발생 시 공공임대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전환 고령자에게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 주택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여 치료, 요양, 양로비용으로 총당 연계

■ 6080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 미끄럼방지 바닥재, 주택내 응급비상벨,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 등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

29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 가능
-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

30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 등으로 건설중흥을 선도하겠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 지능성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 (가칭) 양회동열사 피해방지법 개정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 ※ (가칭) 포항초등학교 감전사방지 건축법 개정
- IoT 등 스마트기술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안전관리 강화
- 싱크홀, 포트홀 등 종합관리 강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 경영환경 개선
-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부여, 공공발주처의 과도한 직접시공 확대 개선 등 건설시장 안정성 제고

-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BIM, OSC 등)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 건축, 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건설전문인력 양성 지원
- 건축자제 품질인증제 적용범위 확대
- 해외건설인프라펀드 획기적 확대 등

31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를 절감하고, 혁신성장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 발행

- 광역교통망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 가능

■ 시민이 직접 선택하는 다양한 패스 발행

구분	내용	비고
데이패스	광역교통망 1일 이용권 발행	거리병산 추가요금 폐지 환승횟수제한 폐지
국민패스	35세 이상 ~ 64세 이하	신규(월 5만원)
청년패스	19세 ~ 34세(청년기본법 적용)	신규(월 3만원)
어르신패스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추가이용	신규(무상)
시간제 패스	8시간, 16시간 등 다양한 패스 발행	요금 책정 (데이패스 기준)
커플·가족 패스	커플용, 가족단위 패스 발행	
외국인용	일시 방문자, 장기체류자 등 대상	

■ (시간, 노선) 네트워크 통합 기반 대중교통공영제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광역내 통용 '무상어르신패스' 발행

32 민주당이 합니다! 철도지하화. 4가지 약속, 4가지 실천

권역별 철도지하화 노선, 구간 비교

노선	구간	수도권철도
경인선	구로~인천	
경원선	청량리~의정부역	
경의선	서울~수색, 수색~문산(도심)	
경의중앙선	용산~도심역	
경춘선	청량리~신내, 춘천역(도심)	
수인선	송도~원인재(도심)	
경부선(서울)	서울~병점, 천안(도심), 평택(도심)	
경부선(부산)	화명~기아~부산	
경부선(대전)	회덕~판암IC	
경부선(호남)	조차장~기수원	
경부선(대구)	서대구~동대구	
광주선	광주~극락강~송정	
전라선	아중~전주~동산	

민주당의 약속

- 약속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는 지하화
 - 노선별 마스터플랜 수립
- 약속② 지하화 · 상부개발 ⇒ 지역 내 랜드마크화 ⇒ 시민의 품으로
 - 상부 · 주변지역 통합개발 ⇒ 자족기능 갖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약속③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추진
 - 경의선(청량리~도심) 복복선화, 경의선(서울~수색) 철도용량 확대
 - 경원선+GTX · 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를 환승 연계
- 약속④ 경제성, 지역 간 · 지역 내 균형발전,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보장

민주당의 실천

- 실천① 도시철도, GTX 지하화 위한 제도 개선
 - GTX · A-F 일부 지상구간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추가 개정 추진(22대 국회)
- 실천② 건폐율 · 용적률 상향을 위한 추가 법 개정(22대 국회)
 - 민간 인센티브 확대
(㉔)지자체 재정 지원(↑) ㉕개발 부담금(↓) ㉖기반시설 비용(↓) ㉗용적률 · 건폐율(↑)
 -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
- 실천③ 사업성 높일 예타 지침 개선
 - 신규 철도 중심 편익산정⇒경제성+지역균형발전
- 실천④ 「철도지하화 · 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 시민 · 지자체 참여 ⇒ 노선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과 그린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 노선 급행화 추진
- 일반철도 고속화 및 고속철도 운행 확대로 거점 간 고속 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및 확대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철도를 통한 산업 활동 지원 및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남북/대륙철도 연결, 국제철도 운행 준비

33 택시운전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25만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생활임금 보장으로 인력대란 해결
- 통합전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운전자 편의 제공
- 운전자 근골격질환 등 본인부담금 경감 등 추진

■ 택시업계 발전 지원

- 수요맞춤형 공공형택시 시행지역 및 지원 확대
※ 100원행복택시, 학생통학택시(도서지역), 어르신·노약자택시, 장애인택시(전국) 등
- 우수사업자 포상 및 재정지원 확대
- 택시 고급화 및 낮은 택시의 교체사업 지원 확대
- 친환경 연료택시 지원 확대 및 전기차 안전대책 강구, 전기·수소충전시설 확충

■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34 반값전기차 공급으로 교통비 절감과 전기차 강국을 선도하겠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를 리스 등 별도 구매로 초기구입비 절감

- (가칭) <배터리유통공사> 설치, 다양한 상품개발 추진
- 배터리 충전식 외 탈부착식 전환 병행 추진

■ 결혼·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전기차' 공급

- (결혼 전제) 예비부부에게, 신혼부부에게 배터리 리스료의 일부 지원
- 출산 자녀수에 비례하여 배터리가격 감면 강구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및 안전 강화

- 고·저속 충전인프라 확충 및 표준화 추진
- 충전인프라 등록 등 관리·안전 사각지대 해소, 업체별 결제방식 통합 등 이용자 권리 강화
- 충전시설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35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외된 교통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겠습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 표준운임제 도입
- 대리운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자법’ 제정
- 이륜차 등 종사자 권익보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자전거 운전자 등 안전취약자 보호대책 강화
-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
- 저가항공업계 육성 및 항공사업 경쟁력 강화
 - 항공기취급업·정비업 등 개선, 육성
 - 지방항공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 국제선 다양화 및 지방공항 노선 확대 추진

36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및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 성별 임금현황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미공시, 공시내용 조작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공시자료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도 도입

- 차별임금 개선시행계획서 제출 및 미제출시 제재 방안 마련

■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 항목에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시행 지표 명시

37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 면접위원 구성에서 특정성(性) 과대대표 제한
- 성차별적 면접질문 금지 등 제재 강화

■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벌칙 상향

■ 채용 절차상 전 과정에서 지원자 및 합격자 성비 공개

-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38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
-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기준 마련 및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가칭)양육비 결정심의 위원회 구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 조사·징수 권한 강화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
-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 추진

■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행위 제재 방안 마련

-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 강화

■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제재 요건 완화

- 지급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

■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 마련

- 시의성 있는 긴급지원 기준 마련과 미달 시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민생 회복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원가 및 적정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 도입
 - ※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6가지 적격비용항목(자금조달, 위험관리, 거래승인·매입정산, 마케팅, 일반관리, 조정) 규정
- 영세·중소소상공인(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임대료가 매출액의 일정 이상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및 '임대료 분담제' 추진

■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추진

■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지속 추진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 불경기시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 등에 따른 퇴거 명령 시 퇴거 비용 보상

■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방지

-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의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0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및 금리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추진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 고금리의 보험약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대출 확대 및 우대금리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에서의 금리인상 등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 대출 총액은 유지하되 신용도는 분리하여 대출기관 위험부담 최소화

■ 새출발기금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 이용 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03 내수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하여 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 상시화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가맹률 제고

■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 *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즉시배송 서비스
- 시범사업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산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 추진

- 온라인 등 급속히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지역상권 활성화 및 대·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지원

04 소상공인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
 - 최대 25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로 적시 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 지원
- 폐업 소요 비용 과다업종은 추가 폐업지원금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확대
- 재취업·재창업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노란우산공제 최소납부금액 완화 등 신규가입자 지원 확대
- 노란우산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 등) 발생에 따라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

05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 저신용 · 창업 · 청년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전문은행 산하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 운영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형성 지원

-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금지

06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 소상공인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추진
- 미취업자의 실무교육 및 소상공인의 구인활동 지원
- 금융 및 세제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우대
- 소상공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 보상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현실화

-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 추진
- 화재공제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화재공제 가입률('24.1월 기준 30.6%)을 제고

07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숨은 갱신(무료→유료)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동의 의무화,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 및 팝업창을 통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금지 등
- 의무 미이행 또는 금지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규율 강화

08 대리점주, 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가맹점주 · 대리점주 · 수탁사업자 ·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 부여
- 하도급거래 · 수위탁거래 시 조합의 교섭권 보장 확대

09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수·위탁업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에 연동

■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검토

-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영세 중소기업의 전력요금 부담금 조정 및 합리적 요금체계를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개선과 탄소중립 노력도 등에 따른 전기요금 연계제도 마련 검토

■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10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 마일리지 혜택 강화 및 결제수단 확대, 대기업 제품 구매혜택 강화
 -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플랫폼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 중소기업의 우수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인력난 해소
-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3년/5년/7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목돈 지급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한 만기의 상품으로 기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로 복원
 - ※ 현 정부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24년 예산에 신규가입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폐지 수순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은행권의 상생 노력 제고
-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은행 연체율 감소 등 촉진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일몰 연장 및 확산

- '24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일몰 연장 추진

11 중소기업의 활로 지원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 팩토링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 기여

■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도입 추진

-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제도 보완
-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표준화된 절차 제공 등으로 기업과 사업의 회생 도모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및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정부 정책,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
- 전시회 및 박람회, 국가별 기술교류 플랫폼 구축 등

■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엄 사업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해외전시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컨소시엄 사업 예산 확대 추진

12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ی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원청과 대등하게 교섭하여 제값 받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요건 완화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협업거래, R&D 등 지자체 및 지방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

1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대상 및 기술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 기술보호 전문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민생 회복

민생
회복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01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을 높ی겠습니다

■ 자산·소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벌금·범칙금 체계 도입 검토

-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행위에 대해 자산·소득 비례 과태료제 시범도입 추진 검토

■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강화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

- 유죄판결 전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 처분 가능하도록 법 개정

02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는,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

- 행사·의전 중심의 정부기념식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운영 재정비로 국민 소통형 보훈 예우의 장 마련
- 공공기관, 공영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제도 확대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보훈의료체계 구축

-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심리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인사, 조달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훈병원 혁신
-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로 입원의료서비스 질 향상
- 전국 보훈병원 어디서든 추가검사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통합연계서비스 구축
- 로봇의족 등 최첨단 보철구 지원으로 청년 상이자 일상복귀 지원 강화

■ 의무·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03 100세 시대, 청년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법적 청년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
 - 각 부처별, 단체별로 상이한 청년 기준 정비
- 체계적인 중장기 청년정책 설계 및 진단 등을 위해 청년정책연구원(출연연) 설립 추진

04 방과후학교를 무상화하고 질은 높ی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 다양한 특기적성·예체능·기초학력 프로그램 마련 및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풀 제공, 방과후학교 모니터링·컨설팅 등 질 관리 체제 마련을 통해 학교 부담 최소화
- 학교별·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지원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지자체·공공기관 협력체제 마련

-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함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추진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서 방과후학교 위상 및 역할 강화
- 기초학력보장, 예체능교육 강화 등 방과후학교 목표 명시

05 아이 안전,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 도시지역 공립유치원·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 운영

- 병설유치원 설치 여부, 학생 수, 원거리 통학 등 고려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 운영
- 병설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1·2학년)을 중심으로 원거리 통학,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이용 지원
- 학교에서 가까운 관내 체험학습에 통학차량 이용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편의, 학부모 부담 경감 도모
※ 다수 학생(학년별) 체험학습 시 타학교 통학차량 지원 체계 구축
- 읍·면단위 등 기존 통학차량 운영 학교도 학생 수요, 원거리 통학 비율 등 파악하여 추가 배치 지원

■ 통학차량 운영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 통학버스 운전원, 보호탑승자 상당 부분을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운영
※ 교육지원청 차원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 학교 앞 교통지도 외에 '안전한 통학'을 위한 어르신 참여를 확대하도록 인건비 지원

06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 구축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일정 기간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
※ 현재 교육부가 위탁·지원하는 '해맑음센터'(전국 단위) 벤치마킹
-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및 기숙사 설치

■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천7백 명 배치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를 신규 임용함으로써 현재 비정규직 상담사가 대체하고 있는 학교에 모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교육청 소속 순회 전문상담교사 확대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 지원 강화

07 보육·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책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 기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
- 추가 소요 재정은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공동부담하여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 뒷받침
- 교사 양성과 재교육, 교사처우개선, 보육기관 시설 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08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범부처 차원 비상대책 마련
-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검사 결과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 시행
-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 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위기 개입 지원 확대,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의무화

09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먹거리 기본법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신설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 추진
-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1인가구 등의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및 단가 인상
-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으로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공급
 - ※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
- 초등학교에게 과일간식지원으로 식습관 개선, 국산과일 소비확대
 - ※ 본 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전액 삭감

■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음식 제공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 소비자의 알권리 · 선택권 보장 위해 GMO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 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법’ 개정으로 LMO로부터 안전한 국민 밥상 실현

10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 절차 개선 및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 모든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편성·지원 확대

- 모든 지상파방송과 IPTV, 종합편성PP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유료방송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 일반 시민 및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는 전(全) 생애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및 학교 교육체계 마련
- 부처 간 정책 조율, 인력양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활용 지원 등 미디어 교육 종합 정책 수립
- 디지털 미디어 교육 총괄하는 '(가칭)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 수신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 체계화

-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가칭)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 관리·감독 강화
- 수신료 지원 대상 공영방송의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첨부,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확보

11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범국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지역별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전문 강사(IT복지사)'를 통한 범국민 생활형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키오스크 및 생활형 앱 활용 교육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스마트 기기 제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컴퓨팅 교육부터 디지털 기술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무료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SW, AI 등 디지털 교육과정 수강 지원
-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 포함

12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보상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 현실화

-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H) 입소훈련 → 3박4일(주말 포함)로 변경하고 동원훈련기간 1년 단축
-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

13 위케이션 및 마을기업·청년마을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특색에 맞는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과 기업은 손쉽게 참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가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에 제안하고, 국민 호응도 및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 온라인 영상회의 시설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지역체험 프로그램

[현재 운영중인 위케이션프로그램 -(강원 양양) 요트체험, (제주) 낚시체험 등]

■ 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청년마을이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 청년마을과 마을기업 및 위케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허브구축

※ 위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는 제도

14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부의 저작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의 원칙 준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노력

▮ 문화예술인 교육·고용·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 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원법)

- 문화예술인재개발원(가칭) 설립
- 청년예술인 산학연계를 통한 예술인력 수급 기반 조성
- 예술인력 수급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보호를 통한 창작분야 지원 확대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정 기반 마련

▮ 문화예술계 현황진단과 대응을 위한 '예술인활동지수' 개발

▮ 청년·신인 예술인 자립을 위한 '예술공영유통센터(가칭)' 설립

- 예술창작품 및 산업화 지원의 온·오프라인 거래소

▮ 청년 예술인 및 예술대학(원) 학생들의 저작권리 보장

- 전국 문예회관 활용 지역 예술대학(원) 산학-민관 연계 지원
- 지역 청년 예술인 전시·공연 특화 지원
- 예술교육 기관의 착취·가해에 대한 제도적 제재방안 마련

15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자부담분 지원 확대 등 지원 체계 전환(평균 가입률 30% 미만 → 70% 이상으로 확대)
- 예술인 복지금고(공제회) 조성

■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확대(2개소→16개소) 및 야간 실행기관 확대
-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공공센터 구축 및 민간협업 지원)

■ 예술인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

16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문화향유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및 사용처 할인 확대
 - 지원액 : 13만원(24년) → 20만원까지 단계적 상향
 -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 사회공헌 문화누리카드 도입(65세 지급/ 50만원)

■ '청년 문화패스' 지원 확대로 청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1단계 : 청년주기별 19세 도달 · 30세 도달(1회당 50만원)
- 2단계 : 17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

■ 사회적 질병 극복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 여기활동 다양화를 위한 평생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

■ 현 정부에서 폐지·축소된 국민수혜 문화예술정책 복원

- 지역 문예회관연합회, 문화원연합회,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강좌, 마을도서관, 출판사업 지원 복원

17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 장애인형 · 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75개소→190개소)
-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 ‘스포츠가치센터’(현재 1개소) 전국 확대
- 현 정부에서 폐지된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지속 추진
-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충(90개소→200개소)

■ 지역 종목별 생활체육 동아리(클럽) 장비 · 활동 등 지원

- 생활체육 종목 · 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 AR · VR 활용 지역별 스마트체육관 건립

■ 어르신 건강권 확보 지원

-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 인프라 확충
- 어르신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어르신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추진

■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 지역화폐 환급대상에 스포츠업 추가 및 환급규모 확대

■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 고용보험 도입, 재교육사업을 통한 고용지원 강화
-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 수혜대상 확대
-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강화

18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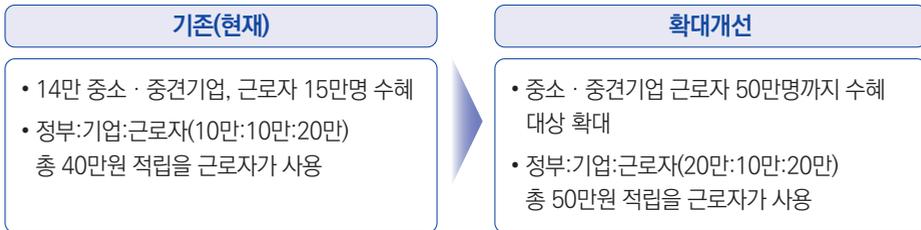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 신청자의 방문지역 사전예약 → 지역사랑 휴가지원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정부 15만 : 지자체 15만 : 신청자 20만)
-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 지자체 매칭의 여행 지원 확대

'숏컷여행(가칭)' 지원

- '1박2일' 기한의 짧은 여행 지원
(본인 10만원 : 정부 10만원 매칭 → 총 20만원 적립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해양 · 섬, 농어촌, 숲 · 산림 등 지역자원 활용 특화관광 활성화
- 노후 및 유휴 관광시설 재생

■ 국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어르신 : 평생교육원 연계 '실버여행학교' 지원
- 가족 : 공정여행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인증제 실시 · 확대

■ 지방공항 기능 향상 및 LCC(저가항공) 해외 노선 확대 지원

- 신규노선 확대 및 국제 부정기편 허가기준 완화
- 인바운드 수요의 해외노선 신규취항 시 관광기금 지원

19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

-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여 생명으로 존중
-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 부여
-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동물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 ※ 시설별 사육 마릿수 제한, 동물 질병·행동 등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 강화 등
-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 ※ 동물생산업·판매업 점검 기준 강화(정기/수시 검사 등),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 시설(신종펫샵 등) 운영 금지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현실화(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등)
-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 관리)

■ 반려동물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 개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추진

■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 역할 강화

-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및 지자체관리 강화
-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강화
- 생태친화적 동물원 만들기로 토착동물들이 찾아오는 동물원 조성 추진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지원 확대(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으로 판로 확대)
-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농가에 직불금 지급(농장동물복지직불제* 도입)
*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실험동물의 희생 최소화
-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20 군 급식 조달체계 유지를 통해 어업인 피해 방지와 우리 군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경쟁조달 전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 추진

- 전·평시 안정적 공급 등 고도화된 現 수산물 계획생산체계 유지
- 1970. 1월부터 약 50년간 국방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정립된 군 급식 조달체계 유지
- 現 계획생산체계 유지 하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 '21년 군 급식비 기준 수산물 급식 비중(12.5%) 유지

- '21년 군 급식 총예산(약 16,000억) 중 수산물 예산(약 2,000억) 유지
- 고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공급 및 전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 피해 방지

21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 적극 추진
-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 의료인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의 합리적 증원안 수립
-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시 합격을 제고를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
-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마련

■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 과정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 기준 개선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 대폭 강화
-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
-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 확보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및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 지원

22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ی겠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 대폭 완화하고,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

■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마련

-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 적합한 맞춤형 간병서비스 제공

■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강화

-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직접 고용으로 간병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강화
-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23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로 노인질환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 재택 의료서비스 및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 방문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누구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 방문·비대면 진료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 확립

- 방문진료와 비대면 모니터링을 연계한 노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 편의성·접근성·지속가능성 고려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24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 대상 제한적 허용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

-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
-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안전 강화
- 처방전 발급 비용 절감 및 환경문제 해소

■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적 활용 기여

25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
-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총 4개)

■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 완화

■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개선

- 완치 가능한 C형 간염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환자 조기발견
-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질환 퇴치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고위험군 · 고연령 대상)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26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아비만·소아 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

-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법」 제정
-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캠페인·국제협력 강화
- 국가건강검진에 '비만 검진' 항목 추가, 한국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

■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지정
-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
- 학교·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상담·관리·지원 등 포괄 서비스 제공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련 학교·지역사회의 인식향상·홍보·교육 적극 지원

27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ی겠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인하
- 희귀난치질환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재원 확충

■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등제 제도 개선
-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공급 확대
-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목허가 확대

28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SI 활용 지원

■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약품 공급 안정

-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해소

29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2023년 기준 약 30만명 추가 혜택)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 요양병원 입원 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 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에게도 보험 혜택 적용 (약 10만명 혜택)

■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대규모 확충. 재가(방문) 요양·가사 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 지원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서 원룸 크기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등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을 지원.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도 설치하여 복지 및 돌봄서비스 제공

30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

- 장애인복지의 기본 철학을 시혜와 지원에서 권리와 자기결정으로 전환
- 생활보장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이동권,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가족생활권, 재할권, 정보접근권, 문화권 등 장애인의 권리 체계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 보건, 의료, 요양 등 복합·다중 욕구가 있는 최종증 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사 비매칭 문제 해소,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등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재가 중증발달장애인 독립주거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임금, 편의제공 등 장애인 일자리 질 개선

■ 장애판정체계 개편을 통한 당사자 중심 정책 실현

- 개인별 사회환경요소를 충분히 반영토록 장애판정체계 개선
- ‘화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요인의 장애 인정 추진

■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체계 구축

31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 외로움 인구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 대응 정책 수립 등 담당. '뉴노멀(New Normal)' 현상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개발

-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 :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사회활동 참여, 식생활 등 일상생활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지원 정책 : 청소년 및 노년층의 우울, 분노, 스트레스 상담 및 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활동 등 지원 확대. 치유목적 원예활동 등 체험장 조성
- 안전관리 강화 정책 : 화재,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 감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기·장비 보급 및 지역사회 신속지원체계 구축
- 노인·장애인·1인가구 생활 인프라 확충 :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및 공유주거(share house) 보급 확대
※ 공유주거 : 공동주택으로서 주방, 창고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여러 가구가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 절감

32 국민에게 신뢰받는 튼튼한 공적연금을 만들겠습니다

■ 적정 노후소득보장, 미래 연금 불안 해소. 형평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추진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 개혁
-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 세대 간, 지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

- 국민대표 및 이해당사자 대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혁안 확정

33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삶 든든하게 받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대

34 미래형 스마트 캠핑장을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해서 국민의 친환경 생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설치해서 국민의 친환경+생태 여가활동 지원

- (화기안전공간) 취사-캠프파이어 이용 시 전문 장비(흡입기와 분사소화)를 이용하여 별도의 안전한 화기 사용 공간 제공
- (차량배출탄소 흡입시스템) 공회전 차량배출탄소를 별도로 흡입하는 시스템
- (덤프스테이션) 차박 후 오물 카트리리지 전용 배출 시설
- (오수처리시설) 이용객의 샤워 및 설거지 후 배출되는 오수 처리
- (전기충전소) 탄소제로를 위한 전기차 사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캠핑용품 전시-판매 및 마트 운영) 지역 소상공인(정육점, 편의점 등) 입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에게 구매 편의성 제공

35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를 실현해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중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정 또는 협약 수준의 공동 저감 방안 마련

-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중국 기여도가 32~63% 수준으로 중국의 영향이 크며, 한·중·일 공동연구에서도 서울지역의 경우 중국의 기여율이 39% 수준으로 나타났음

■ 대규모(1-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원격대기관리시스템(TMS) 설치 신속 추진

- 대기배출사업장 중 20톤/년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5,769곳, 이중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TMS가 설치된 사업장은 869곳(15%)

■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신속하게 미세먼지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 전국 67,271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중 91%인 61,502곳이 배출량이 10톤/년 미만인 4-5종 사업장으로 이 중 7,363곳(2022.12월 기준)에 만 IOT 센서가 설치된 상황임

36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근로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으로 급박한 고용위기 능동적 대처
-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 조기 구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 자발적 이직자·퇴사자(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 보장 추진
-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자영업자 급격한 소득 상실 보호방안 마련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초단시간노동자, 65세 이후 취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37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기간 ·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 소득(대기업 300만원) · 연령기준, 고용보험가입이력 있는 외국인근로자
- ‘직무능력은행’ 구축으로 개인이 교육 · 훈련 등으로 취득한 직무능력정보 통합 관리 · 활용
-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으로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편의성 제고

-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 직업계고교의 교육-자격시험 관련 비용 전액 지원

38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 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
* 자영업자 세부 특성(근로자 고용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 보험료 부담, 인센티브 등 탄력적 조합. 타 사회보험제도(건강보험, 상병수당 등)와 연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업무상 질병 유형별 재해조사기간 구체적 법정화로 조사기간 단축
-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원인 불명인 희귀 질병의 경우 등 산재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상병수당제도와 연계)
-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명문화
- 특정 업무상 질병에 해당 여부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으로 전환(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대상 질병 확대)*
*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목록상 질병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입증(국가인권위원회(2012.5) 권고)

39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 확대
- 노동조합 가입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도화
-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경우로 국한
- 대표성 있는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업종·지역의 동종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 강구

■ 「헌법」 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 공무원 및 교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 사업(장) 취업규칙(사용자 일방 작성)을 노·사가 합의하는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표회의' 제도 도입
- 기존 취업규칙을 '노동자 대표회의'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사업장 협정' 대체

40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성평등 전담부처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의 고유한 입법·예산 및 조직 강화
- 성평등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

■ 구조적 불평등 사회 해소를 위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 중앙 부처, 중앙과 지역의 성평등 정책 조정·집행기능 강화
- 차별·혐오 해소와 세대·젠더 공감 역할

41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해체 수순으로 정부가 삭감한 청소년 예산 복원

-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 청소년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민생
회복

4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01 범죄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 문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의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 대응방안 수립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심리치료 확대
- 소년범죄 대응 전담조직 강화 및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회복지원 강화

■ 범죠평방특별법 제정

- 범죠평자치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죠평방대책 마련 및 점검 추진

02 피해자 관점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눈높이에 맞는 양형 추진

- 양형위원회에 시민참여 위원 두 배 이상 확대
- 벌금형 · 작량감경 등 양형기준 보완
-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권 강화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 감경 금지

■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범죄자가 내는 벌금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법 개정

■ 재산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몰수 · 추징 · 환부 제도 개선

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국민 정보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 산업진흥과 개인보호의 이해상충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역할 강화

■ 개인정보 유출·침해 대응 일원화로 실질적인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04 사이버 보안 강국의 길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

-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융합 보안, 인프라 보안, 신종 사이버 위협 등) 관련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의 사이버 공격 방지 신기술 개발 · 확보
 - ※ 융합 보안 : 디지털 + 시티, 공장,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 ※ 인프라 보안 : 유 · 무선 통신망 재난, GPS 혼선, 우주전파 재난, 클라우드 해킹에 대한 보안
 - ※ 신종 사이버 위협 : 랜섬웨어, 스미싱, 키오스크 등의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보안
 - ※ 공격 방지 신기술 : 개인정보 가명처리기술, 양자암호,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
- 디지털 대전환(DX) 관련 신기술 분야의 융합 인프라 보안 강화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 DX 관련 신기술 분야 : 양자암호, 5G,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 공격 근원지 추적, 자동화된 증거수집, 공격 인프라 및 공격자 식별, 공격 유사도 분석 등 기술 개발 · 보급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정보보호학과 및 정보보호대학원의 확충 및 공공, 민 · 관 사이버 보안전문기관 확대로 융합보안 등 신규 보안영역에 대한 인재 양성 강화
- 정보보호산업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확대
- 예비 인력 및 재직자의 실무 능력 증진 위한 실전 교육 및 훈련 강화

■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혁신 보안제품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先도입 後점검, 인증절차 명확화 등 제도 개선
- 보안제품의 적정 대가 지급
- 유망 보안 스타트업 육성 및 보안기업 M&A 활성화

0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국제공유재로서 동아시아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오염수 방류 방지

- 해양법 협약, 해양재판소, 유엔인권이사회, WHO 등 국제기구에 지속적인 문제제기
- 원전밀집도가 높은 한중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전과 오염수 관련 한중일 소다자주의 협의체 구성 및 협의
- 태평양연안국과 캐나다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자주의 공조, 일본의 지자체 및 시민사회등과의 공조를 통한 국제여론 환기
- 정보 공개와 공유, 상호감시 및 관리체제 강화

0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어업인 피해 지원 및 국민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제·개정 추진
-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어민 보호
-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방법을 ‘해당국가의 행정구역명’까지 표기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도모

■ 수산물 위생·안전대책 강화

- 국내 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 구축 확대
- 생산단계의 수산물은 산지위판장을 통해서 선박·양륙 단위별로 방사능 검사 후 수매하고, 생산이력 관리 확대 및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
-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수입수산물유통이력 관리의 전 품목 확대 및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수산물 이력제 의무 도입 추진

07 재외동포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로 여행객·재외국민 안전 강화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한글학교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

■ 국내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및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동포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개선
- 귀환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국내 동포 주요 정착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국내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 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한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08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 스쿨존에서 통학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과 집중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 고령자 등을 위한 첨단안전차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등 복지교통 확충

■ 안전 수단 및 시설 확대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 배달대행 영업점 등록제 도입 및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 렌트카 등 공유차량 안전성 확대 및 전동킥보드 등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터널시선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연결통로 등 터널 내 주요안전시설물 엄정한 설치 및 관리로 터널 및 지하차도 사고 제로화 추진

■ 안전관리 및 지원 공공역량 강화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음주운전예방기금 신설 추진
- 교통안전국, 교통안전위원회 등 교통안전 전담 부서 신설
-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충

- 교통법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
-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예방시설 설치 예산으로 활용

09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흉악범죄 통계 작성 및 AI 분석이 가능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 경찰의 현장순찰 강화 및 흉악범죄 적극 대응
 - 방검복, 호신용 경봉 등 경찰 보호장비 지급 확대
 - 경찰의 초과근무 예산 확대 등 근무 여건 개선

10 화재안전 장비 확대 및 최신 소방장비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 소화기 · 화재감지기 · 가스누설 경보기 · 완강기 · 경량칸막이 등 설비 확충 및 지원

■ 노약자 · 어린이 등 화재 취약대상이 신속히 대피 · 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지원

■ 산불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고정익 소방 항공기 등 최신 장비 도입

■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 개발 · 보급

■ 균질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재정 강화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하여 소방장비 구입 · 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11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 소방수요 및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신속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본부장 산하 중간 직제 신설

■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 강화

- 재난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며, 보존기간을 늘려 재난 이후 당시 상황을 복기 가능하도록 시스템 강화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는 훈련 강화 및 지속적 예산 투입

12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전담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전담기관 신설 추진

- 육해상 통합 환경관리 추진 및 하구역 통합관리
- 해양쓰레기 등 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해양·수산 보호구역 통합 관리 전담기관 신설
-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연계 관리

13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

-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

■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범정부 연계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전략적 국가 R&D 투자 확대

■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 마련

-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14 강남·광화문 지하철, 포항 지하주차장, 오송 지하차도 같은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광역도시의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지원 대상 발굴

※ 기존 도심지역 대중심도 하수터널은 부천시, 서울 신월동(지하 40m, 관경 10m, 길이 4.7km, 용량 320,000m³, 총사업비 1,380억원)에 설치돼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 예방 실현

■ ‘도시침수(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해서 도시침수 사전 예방

- 기존 135곳의 상습침수지역과 최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비교 검토해서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
-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한 지역의 경우 사업규모 재설정

■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줄이기 사업추진으로 도시침수 사전 예방

- 도로 및 인도(블록) 포장 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투수블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15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녹조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4대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개방하고, 취양수장 위치 개선사업 신속 추진
- 밭에서 유출되는 인, 질소 같은 비점(Non-Point)오염 관리 강화
- 하수처리장 배출수 인(P)농도를 지역 구분 없이 0.2mg/L로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의 경우 0.1mg/L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 녹조 성장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 처리제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검토 추진
※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수 처리제 사용 중

16 화학물질에 대한 꼼꼼한 정보 확보와 신속제공으로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작업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화학물질 유해성 신호등(GHS 심볼 및 경고문구) 적용과 유치원 교육 의무화

- 생활화학제품 등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신호등(GHS 심볼과 경고문구)적용으로 유해성 정보 전달 의무화
- 유치원부터 GHS 심볼과 경고문구 교육 의무화로 전 국민 화학 안전 인식 확산
※ 현재 산업용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에서 GHS 심볼과 경고문구 사용 중

■ 화평법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위사용자 의무 강화

- 화학물질 등록자가 안전을 평가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명문화(하위 사용자 책임 강화)
- 화학물질의 노동자 노출 위험 관련 물질평가 과정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17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 폐기물 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를 단계적으로 퇴출해 국민 생활환경을 지키겠습니다

■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 도입

-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
 - 주거공간에는 깨끗한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구분
- ※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폐타이어(국내산, 일본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 등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 중

18 붉은불개미 같은 침입외래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보안체계를 구축해서 동물 매개 전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래종관리 컨트롤 타워(국가침입외래종관리본부)설립 추진

- 다부처가 공조하는 국가단위침입외래종 관리 및 정책수립 싱크탱크 역할 부여
- 각 부처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 및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

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AI 기반 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국가 간 관련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전 세계 침입외래종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개발

19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 플랫폼산업, 서비스업, IT산업 등에서 유발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안 강화
-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보건기준 마련*
*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프리랜서 고객갑질 등 각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의 예방·대응위한 실질적 조치 반영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재예방정책 집행

■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야간근로자 과로사 방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 마련
- 신재생·수소 에너지 등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마련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매년 ①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②안전보건투자 규모,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④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 ⑤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장 벌칙 도입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산재예방예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 집중 지원

- 사무직 · 고객응대 · 유통물류 등 직업별 건강위험요인별 건강진단 맞춤형 지원 및 콘텐츠산업 제작현장 노동안전시스템 구축
- 고령노동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이주노동자 맞춤형 사고예방 프로그램 시행
- 조리업무(동네) 식당노동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중장년 건설일용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 특수고용 · 플랫폼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 특고 · 플랫폼종사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건강 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공공 주치의 직업건강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 폭염, 혹한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노동자 참여 등 제도화
- 도급 위험작업 시 1조 2인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20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 추진
-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신변안전조치 강화

■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적극 반영으로 엄정대응

■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 직장 내 스토킹 특성 고려한 법적 규제와 대응 매뉴얼 마련

■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스토킹 행위 포괄

21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범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중심으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목적 조항 개정

■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 가정폭력 현장 조사 거부·기피 행위 벌칙 강화
- 경찰관의 주거지 등 폭력현장 진입 대응 권한 부여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확대, 휴가 보장 방안 마련
-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강화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과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
(현행 500만원)
-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강화



민생 회복

미래 성장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혁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극복에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 5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6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 7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5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01 정부연구개발(R&D)예산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로 지속적 R&D 투자 담보하겠습니다

- 정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대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
-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충실한 배분조정 심의를 위해 심의 기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 민간전문위의 심의 기능 강화
- 예산배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예산 심의내용 및 조정핵심사항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제도개선
- 연구자 규모에 따른 기초·원천기술분야 R&D 안정적 투자를 위해 지원 비중을 사전 설정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이탈 방지

02 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으로 범부처적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강력 추진
-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실행주체인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 신기술개발에 의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조정 체계 정립 및 입법의 선제적 대응 강화

03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중앙주도의 연구개발을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대학 연구개발(R&D) 생태계 지원을 위한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이전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민·관·학 공동협력 인재 육성 체계구축
- 연구산업 기업 육성을 통해 연구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04 국가 대전환과 혁신성장을 이끌 젊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 미래 실수요 분야에 적합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 · 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현장 · 지역 · 청년 ·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 이공계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여 인건비 지급 하한선을 설정 청년 연구자의 연구 안정성 확보

■ 젊은 신진연구자(신임 전임 · 비전임 교원 및 비정규직)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기반 과학기술인의 사업화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분리과세 추진

■ R&D성과 활용 및 사업화 활성화 제고를 위해 *혁신박스 도입 검토

* '23년 일본이 도입 성공하고 있는 제도로 지식재산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하는 것임

05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혁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정책, 전략수립 및 연구분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선임직 이사에 산업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포함토록 이사회 구조 개편 추진
- 출연연의 범부처적인 위상 회복과 종합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관리 기능을 과기부 1차관에서 혁신본부로 이관
-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중장기적 연구 안정성이 보장되는 평가방식으로의 혁신

■ 고경력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하고 은퇴 이후에도 연구책임자로 인정하여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과 전문성 활용

■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평균 인원수에 해당하는 대체 인력 정규직 채용 추진

06 중소·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 '24년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D 예산 복원 및 확대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시대 개막
- 팁스(Tips)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2배 이상 확대
 - *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술 기업(창업팀)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 지원하는 프로그램
 - '23.12월 기준 팁스 운영사 총 105개 중 수도권 제외 지방은 31개

■ 중소·벤처분야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 조성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체계 일원화

※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모니터링 실시

07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원 달성

- 5년간 모태펀드 신규예산 2배 확대
-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등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으로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

■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실행-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

-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창업분야 고교학점제 운영
-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 규모 확대

■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 기금은 선배 스타트업-정부-지자체가 공동 조성하되,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 지원
-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08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Say on Climate” 제도를 순차도입하여 기업의 기후공시 강화

※ 2022년 기준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에서 세이온클라이밋 시행 사례 有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 등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

■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및 연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 탄소배출 저감 기업 자금조달 지원

■ ESG 공시,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

- 한국적 상황 · 산업별 특징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 무늬만 녹색인 ESG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
 - ※ ESG워싱: 기업이 ESG 활동 · 성과 등을 왜곡 또는 과장하여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의미, 미국, EU 등 중심으로 관련 규제 강화

■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 기업이 ESG 평가 체계 구축 및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컨설팅 지원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및 우대

■ 정책금융기관의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보증 시 대상 기업의 ESG 성과와 계획을 반영
- 정책금융기관의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09 ESG,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소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준비→진단→이행」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 자금·R&D·공정개선 등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 전통기업의 미래 대응 사업전환을 위한 디지털 및 탄소중립 지원

- 사업전환 촉진의 대상을 업종별, 규모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금융, 인력 등 관련 지원 확대

10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의 수익성만 강조하지 않고 공익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공공기관 별로 기관 및 소속 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평가 체계 도입
- 공공기관 ESG 평가에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등 중요 정책 사안 도입 및 평가 시 최소기준(과락제) 도입
- 공공기관 평가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개선방향 협의·도출
※ ESG는 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을 약칭한 것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공익성·공공성을 높이는 ESG를 중요 사항으로 고려·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11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집중 지원
-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융합화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첨단산업 ·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강화로 미래먹거리 창출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 3대 차세대반도체(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기술 개발
- 차세대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 반도체 ·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중소 · 중견기업) 육성
-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역혁신 역량의 전초기지로 육성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하여 지역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으로 적극 육성
 -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7곳) △ 반도체(2) : 용인 · 평택(메모리 · 시스템 반도체), 구미(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1) : 충남(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4) : 충북(배터리 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 대 · 중소기업 상생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선도형 산업생태계 구축

■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로 산업기술 역량 강화

- 첨단전력산업 ·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로 특정 국가의 높은 의존도 축소
-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의 지속적인 맞춤형 · 패키지 지원으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
* (소부장특화단지 10곳)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 등(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충북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 디지털 전환(DX)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빅데이터 · 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 비즈니스 모델(BM) 발굴

■ 신산업* · 성장동력 발굴 · 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 신기술 · 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확대
- 탄소중립 ·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산업체질 개선 지원
* 신산업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을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의미(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12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 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
 - ※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높은 가격 등으로 슈퍼컴퓨터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22년 Chat GPT가 촉발한 AI 열풍 등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4)을 추가 연장
 -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형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 등
-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 산업경쟁력 제고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 마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

▶ 팹리스 ·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 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충
-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 및 신속 지원
-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강화 및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13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

-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 신흥 수출시장 개척,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 신성장·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중장기 수출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장수요 창출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 기술·부가가치 중심의 무역구조 전환 및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탄소국경조정(CBAM)·RE100·ESG경영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철강 등 탄소다배출 업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강화로 수출애로 최소화
-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략, 해외지사화사업 확대, 전문무역상사 역량 강화, 대·중소중견 동반진출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 추진

- 통상과 무역으로 얻은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익 우선의 통상 추진
- 첨단·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만드는 통상 추진
-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로 우리 산업 및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14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해결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

- 국회가 기존 사업과 스타트업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 산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
- 국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정책 이해도와 투명성 제고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 및 협력 사업 지원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 마련

■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마련
-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15 인공지능(AI)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Korea를 구축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 고성능 컴퓨팅 환경 제공, AI 바우처 지원, 정부 보증 민간 투·융자 확대
- AI 전문인력의 AI 전문기업·연구소기업의 창업·설립 시 정부의 정책금융 대폭 지원 방안 마련

■ AI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학습용 데이터의 전면 개방 및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활용
- 데이터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

■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AI와 클라우드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정부·공공서비스 등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적극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 AI 기술 인재 양성

-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고급 인력 양성
- 산·학·연 연계로 산업+AI 융합 활성화를 위한 AI·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기술 역량 강화 지원

- 정부 출연기관의 AI분야 연구원(研究員)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피노프(spin-off)' 제도 활성화

■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AI 기술 활용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주요 부작용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 딥 페이크 악용,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등

16 IT·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내·외 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SW분야 전공자의 기업 및 기업연구소 인턴십 확대를 통한 기업-대학 간 인력 교류 활성화
-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SW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
- 국내 SW 대학연구소 및 대학 벤처·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 강화
- 해외 우수 SW 인력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창업, 조세, 금융, 행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SW Residency 제도' 도입

■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 SW 수요 예보, 일방적 과업 변경금지 의무화, 합리적인 SW 사업 대가 산정, 변동형 계약제도 도입 등 공공SW 발주제도 혁신
- 공공SW 개발단가 및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국내·외 기업 역차별 개선
- 민간 SW개발계약 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및 정부·공공기관의 상용SW에 대한 개발자의 저작권 보유 개선

■ IT·SW 新기술 융합 가속화

- IT·SW융합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 마련 및 IT·SW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거점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및 중소 IT·SW융합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투·융자 확대
- 공개SW(OSS, Open Source Software) 기반 IT·SW융합기술 혁신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IT·SW 수출 활성화

- 신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거브테크(GovTech) 해외수출 강화
- 선진국과의 AI 기술 협력 강화로 IT·SW 수출 경쟁력 강화

17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콘텐츠 R&D 세제지원 확대

-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R&D에 대한 적용 및 공제율 확대
- 세제지원 대상을 콘텐츠 창작개발의 시설, 참여요원 등으로 확대
- 음악·출판·캐릭터 등 콘텐츠분야에 대해 추가(현행 6개 분야)로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추진

■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 자급형 콘텐츠 전문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교육기능⇔기업 맞춤형 인력고용⇔기업⇔연구기관 R&D의 산업화)



■ 디지털 등의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물 보호 체계 마련

-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저작물에 대한 공개 · 보상체계 마련
-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 뉴미디어 제공 저작물의 창작 보호 체계 마련
-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및 민간 협력 강화

■ 예술 창업을 위한 예술 메인비즈(ART MAINBiz, 가칭) 제도 도입

- 문화예술계 메인비즈(ART MAINBiz) 인증제도 신설 및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
- 문화예술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
 - ※ 메인비즈제도 :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 · 서비스산업의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금융 · 세제 · 판로 · 수출 지원

■ 한류 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장

- 국내에 K-POP 국제콘서트 개최(연2회) 및 5만석 규모의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조성
- 한국영화 자료수집 · 전시 · 체험을 위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재제작 지원)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 더빙 비용 · 다국어 번역 등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 콘텐츠 대 · 중소기업, 유통 · 플랫폼사-제작 · 창작자 간 공정상생의 환경 조성

18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 조건부 허용 검토
※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 허용
-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적용
-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허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유동성 제고
- 공정한 가치평가·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보호 강화

19 기술·지식재산 유동화 확대를 통해 딥테크벤처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술거래플랫폼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설치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자산 유동화 지원 연계

■ 지적재산권(IP) 투자옵션부보증 등 新금융상품 확대를 통한 IP금융 고도화 지원

※ IP투자옵션부보증: IP보증 후 일정 시점에 보증액의 일부를 IP소유권(지분)으로 전환하는 상품

■ 비수도권 지역의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 단위의 혁신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편중을 해소

20 스마트공장 3.0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한 일터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24년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28년 7만개까지 보급 확대
-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원

■ 탄소중립 팩토리, 안전한 휴먼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3.0 추진

- 기존 스마트공장을 선진형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
- 마이제조데이터* 중심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 *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데이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공정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화 지원, 현장 인력 부족 애로 해소

21 무선급전트램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무선급전트램 상용화로 세계 최첨단의 신교통 선도



- 2027년까지 무선급전트램 조기상용화 및 시범사업 추진
- '미래형 모빌리티체계 대전환' 선도
- 무선충전기술 및 지능화된 전력공급환경 구축으로 글로벌시장(국제표준) 선점

■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자율협력주행, UAM 조기 상용화, 실증기반 마련
-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구축 및 공개 확대

■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구현

-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 추진
-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 육성
- 해외공항 수주 등 글로벌항공 위상 제고

■ 드론 등 신교통 육성 및 안전 강화

22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지역주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혁신클러스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재도약 기회 마련
- 허브기업 중심의 기업군 이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근거

■ 노후거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급자족·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신산업을 육성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조성(스마트 그린산단, 18곳 기지정)
-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 산단 내 문화·체육시설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 확충
- 산단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 산단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및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에 마중물 역할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내실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舊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8개) : 광주(경형 SUV), 밀양(부리기업 주물제품), 횡성(초소형 전기화물차), 군산(전기차), 부산(전기차 부품),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대구(스마트모빌리티), 익산(식품) → 文정부 6개, 現정부 2개 지정
-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의 확대로 유턴 활성화 제고

■ 지역투자과 고용을 이끄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발굴

- 중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중소→중견→글로벌전문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속 지원
- 대규모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육성

23 스타트업을 지역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 모태펀드 지방계정 2배 이상 확대
 - ※ '22년 기준 지방계정은 자펀드의 3.7%에 불과
-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에서 인센티브 매칭 대폭 확대
- 지역 기반 GP(위탁운용사) 육성 및 LP(출자자) 매칭 강화

■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 지역의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 지역 주민들이 스타트업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 역할

■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혁신 창업 공간 구축으로 지역 활성화 추진

-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위해 창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외국인 비자, 입국 지원 방안 등 마련
- 창업 공간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통해 지역 청년이 정착하도록 유도
 - ※ 지방 소재 창업가 및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주거 지원(임대료) 및 주택 공급(자금 조달 지원) 등

24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 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25 지역금융과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소외지역 내 은행 점포폐쇄 대안 마련

- 우체국예금·지역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시중은행의 창구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은행 간 공동점포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금융 + 지역맞춤형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결합하여 물리적 공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점포 확충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지방은행(지역은행) 설립 검토

-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여 공공성 강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지원
- 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조 확충

■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사회연대신협 설립 유도

- 수신기능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을 지원

26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1기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위임으로 신속한 재개발 추진
-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빈집 녹색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교통이 편리한 2기신도시 건설

- 광역교통시설 및 인접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 GTX·A~F 전 노선 신설·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및 선교통-후입주 실현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27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교육, 보육, 의료, 문화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 국책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 지방이전 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정주인구 외 생활인, 방문자용 인프라 확충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구축
- 혁신공유오피스 등 구축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지방특화형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유형(예시)	사례	비고
건강 및 돌봄서비스형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돌봄, 요양, 치유기능 중심 공동체
은퇴자복합타운형	곡성 강빛마을	고령자, 은퇴자 중심 공동체
학교공동체형	거창, 과산, 대학도시 등	농촌교육 희망자들을 위한 주거공동체
귀농산어촌형	오시리가름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일자리 등 주택단지
에너지전환 결합형	솔라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관광레저형	남해독일마을, 브띠프랑스	역사, 문화 등 이용한 레저형 특화단지
업무창업공간형	두미도 워케이션단지	메타버스기술 등 이용한 창업특화단지
문화예술공동체형	서울예술인마을	작가, 화가 등 주거 전시 등 복합집적단지

- 지방 차별하는 광역교통망 거리병산 추가요금제 완전 폐지
- 100원행복택시, 청소년100원버스 등 국비 50% 지원
- 오지·벽지·도서 등 공영버스사업 전액 국가지원
- 한반도 U자형 철도망 구축 및 U자형 경제벨트 추진
-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으로 '디지털한반도' 조기 완성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행정복합도시 광역발전전략 마련, 추진

28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 인상 및 개선
 - 법개정*과 연계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 의사 양성법

■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stay) 구축
-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
-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중심 농정 실현

-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29 농식품산업을 스마트 미래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현)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5년(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팜) 자동환경제어 기반의 농산물 재배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 (스마트 팩토리) 원물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
- (스마트 유통) 스마트 팜-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안정성 관리 등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농산업 육성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IT, BT, NT와 융복합 연구 및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수출 확대

-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등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농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확대로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30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로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선임대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 연안어선 매입(정부 매입) 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해줌으로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청년 어선임대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하향 조정 추진

- 현재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 자기부담금을 30%(최대 150만원/월)까지 하향 조정하여 어선 임대비 부담 완화

■ '29년까지 청년 어업인 2,500명 양성

- 어업희망 청년에게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 매칭, 임차료 지원, 어업 교육·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연안 감척 어선을 활용한 임대어선 공급 확대(업종 허가 규제 완화)

31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어업인 정착자금 지원 확대

- 40세 미만의 청년어업 창업(예정)자에게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등 창업과 어촌유입 유도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

■ 청년어업인 귀어 정착자금 지급조건 개선

- 물가 상승 반영 및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연차 차등 없이 최장 3년까지 월 150만원 지원 및 지원인원 최대 연 500명까지 확대

32 대체복무제도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을 유지하여 국적해기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1,000명 유지하여 국적해기사 양성체계 구축

- 해양인력의 역할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선방안」(’19.11) 적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감축(현행 1,000명→800명) 제외 추진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연장 추진

33 수산 양식산업·종자산업 육성을 통해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산종자 및 양식어업 생산현장 장비, 기자재 스마트화 정부지원 추진

- 기초적인 현장 필수 수산양식기자재 보급사업 추진

■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 추진

-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 방류지원 사업에서 어촌의 소득증대용 종자와 수산자원회복용 종자를 구분하여 지원

■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우량품종 단계별 집중 방류 추진

- 수산종자산업의 안정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추진

34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 지방의회 사무·인사·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 필수사항 마련

35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습니다

■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

- 광역행정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의 의견을 지방에 전달하는 등 신속한 초광역단위 사업 수행

36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향후 6:4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 한시적(10년)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

- '지방소멸 대응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범부처 컨설팅 추진

■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 및 투명성 확보

-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목적의 법인 기부 허용
※ 현재 개인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
- 법인기부 사업의 지출현황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37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행사 개최, 위탁사무 담당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38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를 추진하겠습니다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 질 제고

- 학생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 수준 지원(대학당 연간 평균 약 3천억원)
- 우수교원 확충, 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개·보수 및 확충
- 학과·전공별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도입, 기숙사 대폭 확충 등 교육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학생·교수 스터디그룹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 거점 국립대간 비교평가지표 공개,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관리 장치 마련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재학생·졸업생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다양한 인턴·공모전 지원
- 취업형 소단위 전공(나노·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의무화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 구축

- (가칭)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 명문화, 여타 국립대 및 지역 핵심 사립대 지원 강화 포함
-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거점 국립대 지원 참여 통한 책무성 강화, 지역산업 연계
- 장학금 대폭 확대 및 생활비 지원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 추진

- 거점 국립대 및 서울대 외 국립대(인천대 포함) 분배 지원, 지역 혁신 사립대 집중 재정 지원
- 기존 국립대육성사업(올해 예산 5,722억원)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올해 예산 1조 46억원)에 대한 1조원 증액 추진

39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또는 인구절벽 대비 탄력적 학교 설립 : 도시형캠퍼스

- 학생급증 및 통학여건 열악 지역 :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소규모 도시형캠퍼스 설립, 학교 인근 건물(오피스텔·상가 등) 매입하여 학교 구축, 자치구 운영 기존 공공시설을 학교시설로 리모델링
- 학령인구 급감 지역 : 넉넉한 학교 용지 분할 공공주택 공급(주교복합학교), 학교시설 유지하되 분교 형태 개편

■ 농산어촌 교육지원 :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구축

- 낙후된 지역과 학교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생활 생태계를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운영
- 학교, 관공서, 유치원,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 운영
- 도시 거주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교 운영 유지

40 지방 시청자들을 위한 지역·중소방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폭 확대 추진

-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시 기금 우선 지원
- 지역·중소방송사의 자체 제작 비율 증가 대비 기금 추가 지원
- 지역민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방송 지역방송사에 기금 지원 확대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신설 추진 검토

■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

- 지상파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재허가·재승인 심사 가점(加點) 부여
- 종교방송사에 기부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 의뢰 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행 광고주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 지역민 소통 창구 활성화

-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강화
-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41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문화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

- 소규모 영화관 · 공연장 · 지역민 모임방 등의 복합형 문화공간 설립
- 신규 설립 및 기존 문화시설 리모델링 지원

■ 지역 문화향유권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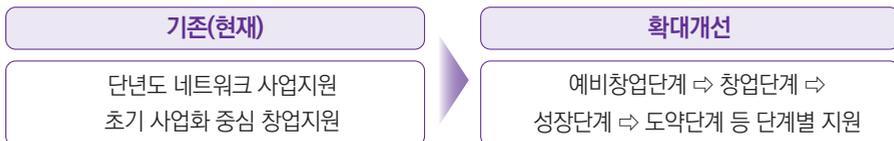
-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 지역 학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실시
- 마을별 문화동아리 설립 · 프로그램 지원

■ 지역 간 문화예술인 교류 촉진

- 광역지자체 중심의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 지원

■ 지역문화 기업(청년창업) 육성

- 지역문화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 신설
- 프로젝트 단위 창업지원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시·군·구 단위의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미흡지역의 설립 지원

■ 지역의 종교·역사적 전통문화 보호·진흥 지원

미래 성장

6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01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에 의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 전입금 확대

■ 에너지 세제 도입 등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 전환부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등 산업부문 유상할당 EU ETS 수준으로 개선

■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일관성 확보

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국회의장 직속으로 탈석탄,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회 책임성 강화
-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지원 및 예산 확대

03 농림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자급목표 명시
-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등 실행 방안 마련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22년 4.5%) 확대('30년 20%)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 한우산업으로 전환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 돼지, 닭 등 그 외 축종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해 전환 지원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과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 임업생산을 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산불예방, 병해충예찰 등)하는 산주에게 직불금 지급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04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대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 중소기업·전통산업 등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
 -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탄소중립산업법(NIA)과 같이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

■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조업 공정 개선 등 기후테크 신산업 발굴·육성
-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 사용 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제 구축, 재제조 산업 확대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화이트 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강화
- 산업 R&D 지원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친환경 공정(工程), 시설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05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을 포함하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활성화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등과 연계
-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 법제도 기반 마련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조정 및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 유도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지원

■ RE100 산업단지의 성공 모델 창출로 우리 기업의 RE100 역량 강화

-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국가 및 지방산단으로 성과 확산
- 입주 중소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전환 지원

■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으로 대상 확대
-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에 지역주민 등이 일정비율 (총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08~최대 0.3) 발급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의2)
-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전력수급의 안정적 기반 마련
- 미래 에너지 및 전력시장의 정책변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에 대응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
- 지역 근로자에 대한 보상, 고용전환 지역,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06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

-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 구축 및 ESG위험에 대한 규율 강화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우대

■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 도입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용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 기후테크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공적기금의 국내외 탄소 다배출사업 투자 제한 및 RE100 등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 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 확대

- 공공조달 시 일정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 의무구매 추진

07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마을 공동체 주도 태양광 ·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 마을회관, 주택 · 축사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태양광 발전 추진
-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 및 투기자본 유입 · 농지전용 · 임차농 피해 · 식량안보위협 등 우려사항 해소
- 가축분뇨 · 목재 · 어패류 · 음식물 · 작물 등 바이오(가스 · 매스)의 재생에너지화

■ 농업인 · 주민에게 햇빛 · 바람 · 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

- 발전이익 공유제로 주민에게 연금 또는 난방비 지급
- 재생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인근 시설하우스 난방 사용

08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서해안·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제약 및 계통 불안정 해소
- 신규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 (23.12.20)
-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RE100 추진
-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로 RE100기업 유치

■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으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 기반 마련

-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산업생태계 조기 구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특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3540 이행에 부합하는 에너지 신산업 발굴 육성
 - 기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성장동력 확보 지속추진
- * 새만금(재생에너지),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등), 충북(에너지융복합 안전산업), 부산·울산(원전해체), 경남(가스복합발전), 경북(풍력산업) 등 총 6개 단지 6지정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 섹터 커플링(재생에너지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V2G(Vehicle to Grid) 기술의 시장 상용화
 - 에너지 절약을 연계한 국민DR* 활성화
- * 국민DR(수요반응)은 가정이나 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아끼는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보상을 받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일명 에너지 쉼표). 계약 전력이 200kW 이하인 전기 사용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입 가능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 수요 효율 제고를 통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보완
-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09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 설치
-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문자료 등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지류 지천 AI 홍수예보 확대

■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 기상청-산림청 간 협업으로 산사태 사전 예보 시간(72시간 전) 단축
※ 2021년 12시간 전, 2022년에는 24시간 전, 2023년에는 48시간 전

■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10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예산투입으로 취약구간 보강

※ 현재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하천은 261개이나, 이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73개 임

■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29곳으로 대폭 확대(現 12곳)해서 홍수대응 강화

-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258개를 집중설치 해서 홍수모니터링, 홍수정보제공, 홍수특보 제공 확대 추진

11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脫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 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 親플라스틱 사회를 →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 유통·소비 → 분리·배출 → 수거·선별 → 재활용(재사용)과 같은 물질 흐름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책 마련

■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

- EU는 포장재 지침 개정을 통해 EU 내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50%(2025) → 55%(2030)) 추진 중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율 현실화 방안 추진

- '재활용 어려움 PET(포장재)' 등급에 부담금 할증(20%)
-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인센티브(최대 50%) 지급 제도 강화

12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실태조사와 DB 구축 및 위험요인 발굴
- 기후위기에 따른 고위험 인구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

■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 추진

-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18-26세)의 최초 납부(18세)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
-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불안감 해소

미래
성장

7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01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습니다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대출은 은행이 담당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

02 자녀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 도입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 동일금액(월 10만원)을 부모도 입금 허용(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 제외)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인출 불가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각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

03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재능학교)을 도입하겠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비중이 높은 돌봄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온동네초등돌봄'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재능학교 프로젝트)

- 운영시간 : 오전 07시 30분~9시, 방과후 2시까지(방학 중 오전 8시~20시)
- 운영방법 : 학교 또는 지자체의 유휴공간에서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 돌봄교사의 추가선발 · 관리 · 프로그램 구성 · 돌봄에 대한 책임 등은 지자체에서 전담
-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및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고, 돌봄교사를 확충,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현재의 돌봄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과 관리 유지

- 돌봄인력 추가배치 : 돌봄전담사 교실당 2명 배치(전일제1명, 시간제1명), 돌봄보안관 배치 (돌봄전용 보안관실 설치)
- 돌봄교실 전용 출입구 설치, 돌봄교실 입출입시 학부모에게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학원이용 시 돌봄전담사 인솔(학원차량까지), 돌봄 중 학원 이용 가능
- 학교통학버스 운영(돌봄 전후 아이들 등 · 학교 및 돌봄 중 수업이동에 활용)
-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제공(방학 점심 포함) : 지역 연계 친환경 우수 급식업체 통한 완제품 제공
-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질 높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 공간 외 다양한 지자체의 유휴공간에서 수업(지역 스포츠 센터, 도서관, 체험학습, 지역 명소 등에서 수업 진행)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학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초등돌봄 운영

04 다자녀가구의 주택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소득에 상관없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05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보편적 보장 도입 추진
- 재원확보방안 및 급여수준 등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 추진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워라밸 프리미엄(각 월 50만원) 급여” 추가 지원 도입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신청 시 ‘자동 개시’ 제도화,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구체화로 불이익처우 금지 실질화
-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 출산휴가 개시’ 제도화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까지 배우자 범위 확대
-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육아휴직 등 사용 구직(실업) 급여 불이익해소
-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로 육아휴직 등 사용 여부 공시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 및 급여 보장 확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휴직기간 각각 최대 1년 6개월 보장 및 대상자녀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최대 3년 사용으로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시) 및 대상자녀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 1달로 기간 확대 및 급여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현행 3일)로 확대 및 급여보장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양육 허용 및 급여보장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여건 개선

- 중소기업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추가수당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육아휴직에 확대

06 10년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호 공급
-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형을,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선 내집마련-후 원리금상환 10년 내집마련상품 등 개발
-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

07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가 무한책임지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
※ 현행 소득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현행 미취학(0~5세) · 취학(6~12세) 자녀 구분 기준 삭제
-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
- 저소득 가구(중위 75%이하) 추가 지원금 10% 혜택 부여

■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 강화

-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육아도우미 실태조사 실시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한 신원 확인증명 강화
- 정부 · 지자체의 육아도우미 자격기준 및 돌봄서비스 관리 모니터링 강화
-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컨설팅 지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임금 향상 등 처우개선 추진

■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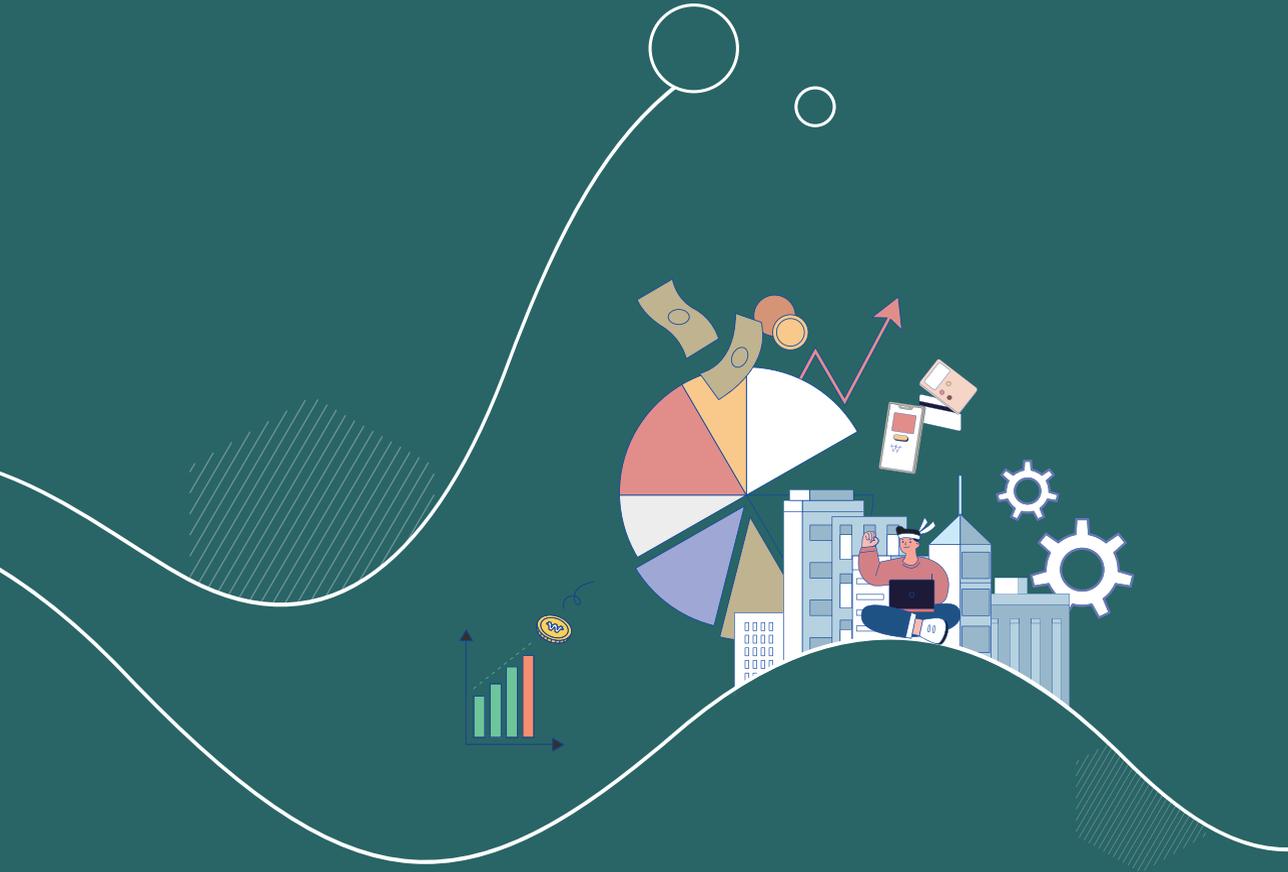
- 미혼모·부의 자립지원 및 양육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학습권, 취업을 위한 교육활동, 돌봄 공백 등 지원
- 미혼모·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배정

이념과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공존과 존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특권 내려놓기로 민의를 옹골게 반영하겠습니다.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ی겠습니다.

민주 수호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 8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9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
수호

8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01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수사·기소권을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 인권보호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방지를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입법화
-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추진
 -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에 누설·유출도 포함
 -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 도입

■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등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

■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 확대

-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해소

02 공공기관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높ی겠습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민주성 제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시 민간위원을 2/3로 하여 정부 일방 통행식 운영 개선
- 장관 추천 운영위원 구성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위원 구성 의무화
 - ※ 현행: ①기재부장관(위원장), 차관급(②국무조정실, ③기재부, ④행안부, ⑤권익위, ⑥인사혁신처, ⑦주무기관), 기재부장관 추천(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11인 이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회 7일 전 안건 공고 등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 통한 졸속 의결 방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도입

03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불법 개입 시 엄중 처벌
- 이사, 임원, 집행기관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정치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법제화
- 편성위원회 기능(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명문화
-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04 헌법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익명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
- 공공의 이익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 인터넷 게시 자유와 규제 제도 개선

- 게시 정보 임시차단 또는 반박내용 게재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게시자의 이의 제기 및 심사 요청 허용(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제도 폐지
-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내용 즉시 차단

■ 인터넷상 이용자의 게시글 유지 결정권 보장

- 인터넷상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유산 상속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사설 디지털 장의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 엄격 법정화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법제화
-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법제화
- 심의위원의 정치활동 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 심의 기능의 개선

-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사안에 대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 심의신청 사유의 명확화 및 피해자 특정 가능 시 심의 개시로 개선
- 자의적 심의 차단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직접 규정
- 법률상 제한 이외 심의위원회 내의 모든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대상의 법정명문화(심의대상 열거주의) 추진
-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분 전면 개정 또는 폐지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심의 신청 허용

0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국회추천을 강화하고, 실질적 인사권 행사

■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07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막겠습니다

■ 조사기관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방지

- 조사대상자와 변호사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 제출 · 열람 금지
- 위반 시 행정절차, 재판 등에 있어서 증거 효력 불인정

■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일괄 적용하여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위반행위 조사 예외 조항 보완 개정

08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주요 과거사에 대한 배·보상 적극추진

09 역사교과서에서 홍범도 장군을 지키겠습니다

■ 역사왜곡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역사교과서 검정본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감시 및 수정 요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검토

민주
수호

9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01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결맞게 바꾸겠습니다

헌법전문에 변화된 시대상 반영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의 기본권 확대

-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알권리 등을 헌법에 명문화
- 개헌과 함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 헌법 제29조 제2항 삭제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선거의 비례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과도한 재의요구권,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명문화
- 국회 의석을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
-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 감사 상대방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

■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국회에서 6인 선출
-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추진

02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 입법실적, 성실성, 청렴성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아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도입

■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현재의 1, 2소위를 조사소위, 심사소위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윤리위는 분기당 최소 1회 개최, 각 분기에 제소된 징계 사안 심의·의결 의무화

■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국 신설

-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윤리 위반 행위 조사, 교육 등 윤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회 윤리조사국 신설

■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 다른 징계와 병과 가능

■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03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화

- 법관 정원 증원,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하여 1심 재판부에 배치
-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 확대
 - 자백사건 이외에 양형만 다투는 경우 등에도 간이공판 절차 적용
- 상고이유서 원심 제출 의무화 추진
 - 심리불속행 여부 결정의 충실성 확보

■ 국선변호인 조력권 확대

-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해 민사 국선변호인 제도 시범 도입

■ 진술녹취제도 및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검토

- 충분한 증거조사로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법관 평가제도 개선

- 법관의 임용, 재임용 기간 중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 우수법관에 대해 인센티브(연구년 등) 부여
- 법관의 재임용 신청 시 재임용심사 의무화
 - 재임용 신청 철회 금지
-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검토

■ 판결문 개방 범위 확대 및 방식 개선

-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형식(XML 등)의 판결문 공개

04 법조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 전일제·주간 과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로스쿨 운영을 다양화

- 로스쿨에 야간 과정을 추가
- 야간 과정 추가를 전제로 신규인가(정원확대) 추진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 확대 및 국가장학금 지원

■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 마련

05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및 결과 공개
- 주식·가상자산 등 직무와 관련 있는 재산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대리자 지정·직무 재배정·전보·직무배제 등 즉각 조치 규정화

■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강화 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06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ی겠습니다

■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예산·결산 기능 강화

- 정부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적절성 점검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낭비적 예산편성 방지

- 정부 예산 사업의 타당성 점검을 위해 신규·기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를 의무화
- 사업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심사 강화

■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 별 성과평가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화
- 반복적인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속 시행 여부를 점검

07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운영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심의 강화

- 그간 국회에 단순히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의 구속력 제고

- 세입을 포함한 중기재정전망 상 재정운용계획과 실적 간에 $\pm 5\%$ 이상 차이 발생 시 정부의 원인 소명과 함께 명시적 개선안 제출 의무화

08 정부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견제하겠습니다

■ 정부의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시 국회 보고 및 동의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여유자금을 이유로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절차 마련

■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국회의 심의 강화

- 현재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연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당해 연도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개선

09 국유재산 졸속 매각을 막아 미래세대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 강화

-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공익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정상화·강화
-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등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민간과 교환 시 국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 마련

10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민 의견수렴 강화

-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화

■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처분 시 국회 보고

- 공공기관 정부 보유 주식의 주주권 행사 시 또는 일부·전부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화

1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리 강화

-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 도입

■ 구분회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립 및 방만 경영 방지

※ 구분회계: ①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② 정부의 '정책사업' ③ 법령에 의한 '대행·위탁사업' 별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현재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30여 개 대규모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재무계획수립 기관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정

12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듣겠습니다

■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현 행	개 정
전액보전 기준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5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5
반액보전 기준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0~15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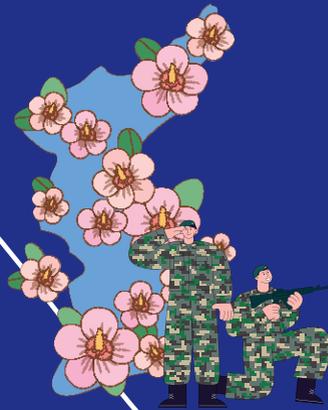
※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

평화 보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능동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10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평화
복원

10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0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변 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 동북아 지역 내 갈등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저지
- 한·중·일간 지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중 우호협력관계 복원
- 한러관계 악화 방지 및 우-러 전쟁 상황에 따라 한러관계 조기복원
- 역사적 사실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한일관계 현안 해결 추진
- 기후위기대응, 개발협력, 보건협력, 국제평화 유지 활동 강화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 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협상력 강화
- 비핵화 과정과 평화과정의 시너지 있는 진행,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

02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 강제동원 노동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기업, 정부의 직접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
- 한일 간 군사협력의 강화가 동북아 지역 안보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에 적극 대응

03 전쟁위기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평화 분위기 조성

- 적대행위 중단과 신뢰조성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
- 9.19 군사합의 이행 촉구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추진
- 남북 대화 촉구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대화 추진
- 남북한 소통 채널 복구

■ ‘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설치 추진

-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강화

04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하겠습니다

■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

- 북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 추진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 인도지원, 개발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북한 주민 인권 증진 추진

■ 남북 문화, 체육, 역사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 남북 공동 각종 기념행사 추진 및 문화, 예술 공연 상호 방문 추진
- 청년, 미래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 남북경협사업자 실질적 피해지원 추진
- 남북 대학생 역사유적 탐방단 상호 교환 추진

05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당직 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현행(평일) 2만원 → 3만원, (휴일) 4만원 → 6만원으로 인상
-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

■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무원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 20년 이상 근무자, 1인당 30만원 지급(밀리패스/격년제)

■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 주택수당과 연계, 초급간부의 주거 선택권 확대

■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정부조직법 개정, 군무원 정책업무 수립

■ 군 장병 복무 중 교육여건 개선

- ‘e-러닝 원격강좌 대학’,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 확대
- 현행 원격강좌 수강료 80% → 100% 지원확대

■ 군 사병 통신비 할인을 20% → 50% 상향

06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방위산업체 책임성 강화

- 방위사업법 개정, 청렴서약서 대상 확대 및 구체화(미등기임원 포함)
- 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간 확대

07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마련을 위해 시험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중복된 시험평가 간소화

- 신속소요 연계, 총사업비 500억 이상 일반 무기체계 사업으로 확대

■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분산된 통합시험평가 조직 일원화



지역별 주요공약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세종특별자치시
 - ⑧ 울산광역시
 - ⑨ 경기도
 - ⑩ 강원특별자치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⑬ 전북특별자치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주요공약 ①

서울특별시

서울부터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근거 마련
-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소규모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급학교 해결을 위한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6개 유형의 도시형 캠퍼스 도입
 - ※ ① 개편형 제2캠퍼스 학교, ② 개편형 주거복합 학교, ③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
④ 신설형 주거복합 학교, ⑤ 신설형 매입형 학교, ⑥ 신설형 공공시설 복합학교
- 학령인구 급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폐교 방지로 통학여건 보장
- 인접 노후학교(40년 이상) 포함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단지 내 학교 조성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입체개발로 교통·환경·도시개발을 혁신하겠습니다.

- (교통혁신) 지상부 교통의 효율성 향상, 도로보행 연계성 제고
- (환경혁신) 철도 소음·분진 피해 해소, 녹지 조성, 도시경관 회복
- (도시개발혁신) 민·관 합동으로 지상부 및 주변부에 대한 창의적 통합개발



내부순환로 ·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자연성 · 지역연계 · 주거환경을 회복하겠습니다.

- 내부순환로 · 북부간선도로 대신도 지하화 및 기존 고가도로 단계적 · 전면 철거
- 녹지 및 지천 복원 · 연결을 통한 서울 강북지역의 자연성 회복
- 대규모 교통량의 대신도 지하도로 우회를 통한 주거환경 회복
-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를 통한 개발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연계 회복

강남 · 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하여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만들겠습니다.

- 중단 없는 경전철 건설로 도시철도 소외지역 최소화
※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건설
-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급행화를 통한 서울시 내부 대규모 수송 효율화
-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거점(서울~경기 · 인천) 간 대규모 수송 신속화



■ 민주당표 3대 핵심 사업(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으로 민주당이 부산 발전 완수하겠습니다.

■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남권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핵심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 중견기업 ·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 추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초정~화명 · 동김해(C~식만)JCT 광역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로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립아동병원 등 공공의료시설 확대 및 지역별 특성화 암센터 지정 등 부울경 건강(Health)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

■ 매력적인 일자리의 친환경 · 스마트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및 전력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조속 추진 및 정부 특구 사업 지정 추진
- 혁신선도 중소기업, 벤처 · 스타트업 대상 지역혁신성장펀드 조성 추진

■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웰에이징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기능 강화 추진
- 노인친화관광특구 지정 및 원도심 지역 노인친화산업특구 조성 추진
- 치매 예방·관리와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프로그램 거점센터 부산 설치 추진 및 읍면동 단위의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확대

■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e스포츠 성지 부산 육성을 위한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경기 유치, 레전드선수 기념관 및 박물관 등 거점시설 서부산권 조성 추진
- 부산종합영화촬영소 조속 건립 및 웹툰IP 연계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아레나공연장 건립 및 첨단 문화콘텐츠 복합 문화단지 등 K-Pop,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추진
-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국립자연유산원, 해양치유센터 등 거점시설 건립 추진으로 생태관광 자원 육성
- 동부산권~해양레포츠, 북항권~해양마리나, 서부산권~해양·생태관광 및 웰니스관광 등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추진

대구광역시



▣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도심복합개발 및 내륙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연내 선도사업 선정 적극 지원 및 시민과 자치단체(구·군)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는 기본계획 수립
-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통합개발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3대 역세권 통합개발로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복합주거플랫폼 조성
-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장, 염색공단, 음식물처리장 등 이전, 현대화 추진
- 서대구역세권에 상설공연장, 중소기업전시관 등 첨단복합문화상업클러스터 조성

▣ 공항연결철도를 건설하고 통합신공항을 내륙중추공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대구~TK신공항~의성까지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급 TK신공항철도 추진
- 국제항공노선, LCC 등 다변화로 영호남, 강원·충청 연계하는 내륙중추공항 건설
- 공항부지와 수성-동·북구-신공항을 연결하는 금호강수변 경제벨트 구축
- 대구의 AI·로봇산업과 경남사천·전남고흥 등 항공, 방산을 연계하는 첨단 우주항공 방산벨트 구축
-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무선급전트램 등 첨단신교통 클러스터 구축 및 항공정비 사업(MRO) 기반 구축

▣ 서문시장, 칠성시장, 약전골목 등을 내륙 쇼핑·물류메카로 부활시키겠습니다.

- 서문시장, 칠성시장, 약전골목 등 34개 전통시장 주차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등 연계 대표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육성
- 우수상품·특산품 상설전시장 유치, 상인회가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시장교육, 시장·배송매니저 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육성



- 역내 중소기업 33만개 및 전통 강소기업(섬유, 안경, 자동차, 기계부품 등)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

■ **메디허브 4종인프라 구축으로 대구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 아동, 여성, 어르신, 중증질환자 전문 병동, 병실을 갖춘 메디타운 조성
- 메디허브 4종 인프라(의료기술시험연수원,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제약스마트팩토리, 창업지원센터) 핵심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 지원, 인재양성프로그램 가동
-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국립암센터 대구분원> 설치
- 대구형 공공산후 조리원 구군별 1개 이상 설치
- 중증중복발달장애인돌봄 <라운센터> 구·군별 설치 지원

■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및 달빛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국회결의안 추진
- 아시안게임 유치에 필요한 국제수준의 숙박, 교통, 문화인프라 국비지원 확대
- 「국립대구국악원」 유치로 지역 내 전통예술인 보호, 육성 및 남원·진주국악원 등과 문화교류 활성화
- 대구 로봇산업과 광주 반도체단지 지정을 통해 달빛경제공동체 추진
- 국내 다문화가정 및 동북아국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 셔틀버스 등 운영



지역별 주요공약 4

인천광역시

■ ‘사통팔달 인천’ 교통망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GTX-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 GTX-D(Y자) · 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 인천의 변화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 경인선 철도 · 인천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개통
-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 그린뉴딜 도시재생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 '시민의 행복',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 강화, 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 미래세대의 꿈 실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 1인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지역별 주요공약 ⑥

광주광역시

■ 광주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X-MAS(모빌리티·AI·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 혁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한 실증특례 지구 지정
- 地·産·研 연계 혁신기술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기업 중심 광주 거점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 추진

■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한 서남권 최대 창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대학 연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모델 구축
- 지역특화산업 연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및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광주 (구)신양파크호텔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 전문화·세분화된 「전문예술극장」 건립으로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공연문화 관련 사업 연계 활성화

■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통해 세계 유명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
- 무등산의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교육·홍보 강화

■ 광주광역시 도시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500년 역사의 중심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 보존과 전시를 통한 도시 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적극 지원

지역별 주요공약 ⑥

대전광역시



■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과학도시 특성과 연계한 관련 공공기관 유치 이전
- 구도심 재생을 연계한 혁신공간(공공기관, R&D센터, 공공·민간 지식산업센터, 일자리연계 임대주택) 조성

■ 대전을 글로벌 실증도시로 조성하여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글로벌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대덕특구 50주년 및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계기로 연구개발특구*를 대전시 전체로 확대
- *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로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 회덕JCT에서 유성IC까지 11.1km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대
- 유성IC에서 서대전JCT 구간 중 3.2km를 지하화하고 전체 7.5km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



■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으로 명품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 지속적인 도시발전 및 도안 3단계 구역의 계획적 개발과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 조속한 이전
-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서남부도시 완성

■ 대전을 스마트농업의 거점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농업기술 연구 단지 조성
-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 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을 명실상부 정치 행정 중심 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개헌 추진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 국회 미이전 상임위 및 소관기관 이전 추진
-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 KTX 세종역 설치

■ 메가시티 충청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키우겠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자족도시 세종을 위하여 미래 산업 육성하겠습니다.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에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관련 R&D 기업 유치
- R&D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 유치

필수 · 공공 ·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세종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별 주요공약 ⑧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광역역세권 거점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간절곶 해양관광특구 지정
-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 KTX 역세권 4차산업특구 지정
- 제2 혁신도시 유치
- 동해남부선 중심 역세권 대발과 정주도시 인프라 구축

▶ 광역 교통 연결망 구축 : 정체분산형 도로망을 개설하겠습니다.

- 울산 남부권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울산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및 지선 연결
- 울산권 광역철도(울산~가덕도신공항) 조기 건립
- 트램 조기 도입 건설
- 울산 - 포항간 고속도로 성안IC 신설
- 국가산단 물류 개선을 위한 국가산단 IC 신설

▶ 울산시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UNIST 의대 병원 설립
-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
- 공공달빛어린이병원 유치
- 공공 실버타운 건립
- 울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석유화학, 국가산단 노동자 맞춤형 응급의료센터 확충)



■ 울산 미래를 위한 신산업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한국형(기구산업) 특구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유치
- 조선업 분야 수소연료선박, 수소전지 등 차세대 먹거리 관련 인프라 구축
- 미디어복합타운 조성과 K-Culture 교육진흥원 설립
- 대왕암공원 일대 해양체류형 관광명소 조성
-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지구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편의 시설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 울산형 안심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사회복지회관 신설 및 지역 복지관 증설)
- K-패스 울산 도입 및 울산페이 안정적 발행(고정 예산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속 가능한 '노동친화도시' 실현
- 첨단 복합타워(주차·문화공간) 건립(울산 최대 상권 밀집 지역 주차장 해결과 청년,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 울산형 돌봄 책임제 도입(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의 질과 지위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지역별 주요공약 ㊦

경기도



▶ 경기도에 가해진 온갖 길러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 성장촉진권역 신설(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 포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용인 일부)
-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 경기도 북부· 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경기도 중부· 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우리 동네 앞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겠습니다.

- 경기도형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 실현
- GTXA·B·C노선 연장 및 조기 완공, D노선(김포· 하남) 연장, E노선(시흥· 광명신도시· 구리· 포천) 신설, F노선(파주· 삼송· 우례· 광주· 이천· 여주) 신설, G노선(하남· 광주초월· 용인 이동· 오산· 화성· 안산· 시흥· 부천) 신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 철도 연장(경강선→광주· 용인· 안성, 신안산선→송산· 남양· 향남· 동탄· 부발선→용인· 마장· 부발, 서부선→서울대관역산역· 안양), 수도권 순환철도망 조기 완성 및 경기 북부 광역 철도망 연결
- 지하철 연장(3호선→성남· 용인· 수원· 화성, 신분당선→광교· 호매실· 봉담, 5호선→방화· 김포, 6호선→신내· 구리· 남양주, 8호선→판교· 오포, 9호선→강동· 하남· 남양주), 인덕원· 동탄 전철 조기 완공, 도시철도· 트램(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안산· 시흥· 부천· 양주· 포천·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망 구축, 국지도 43호· 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 경부선 지하화(서울역·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병점· 오산· 평택), 경인선 지하화(구로역· 부천· 인천)



■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에 맞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
- 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 1기 신도시(성남분당 · 안양평촌 · 군포산본 · 부천중동 · 고양일산),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 주택단지(안양포일 · 광명철산 · 광명하안 · 고양화정 · 고양능곡 · 수원영통 등) 재건축 · 재개발 지원
- 3기 신도시 GH공사 지분 확대, 경기도형 신도시(광주 · 이천 · 여주) 20만호 공급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웰컴박스 지원

■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반도체 벨트 육성하겠습니다.

- 남부 · 동부(수원 · 용인 · 평택 · 화성 · 성남 · 오산 · 안성 · 이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 북부 접경지역(김포 · 파주 · 고양 · 양주 · 동두천 · 연천 · 의정부 · 포천 · 가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 동부권(용인 · 광주 · 여주 · 이천) 반도체연구소 확대,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광명 · 시흥 · 판교 · 일산 · 양주 · 고양 · 파주 · 의정부 · 포천 · 구리 · 용인플랫폼시티) 조기 준공
- 반월 · 시화(안산 · 시흥) 공단을 강소기업 고도화단지로 전환 지원
- 3기 신도시(고양 · 부천 · 남양주 · 하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 경기도 미래세대 청년 · 여성 복지를 챙기겠습니다.

- 경기 북부 체육고등학교 설립, 경기도 청년기숙사 4개 권역(동부 · 북부 · 서부 · 남부) 설치
- 경기도형 공공의료원 권역별 확대로 경기도민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20~30대 여성 유방암 조기검진, 자궁경부암HPV 백신 9가 접종 할인(12~17세 여성 무료)
- 3기 신도시(고양 · 부천 · 남양주 · 하남) 의사사회복지시설 확충(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천원의 아침밥(도내 대학교 확대 및 고교 3학생 확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혁신성장으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강원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시대 실현과 미래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 태양광, 풍력, 수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재부품기업 유치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의료데이터·정밀의료 중심의 연구 개발특구 지정, 지역맞춤형 SW·ICT 인재 육성 등으로 강원형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강원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GTX-B 춘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조속 추진, 강원영서권(춘천~원주)~수도권 전철 건설 등으로 강원 영서권~수도권 1시간 이내 교통망 구축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및 춘천~속초 철도 조속 추진, 춘천~철원 고속도로 및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추진,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으로 미래 남북교류 기반 확립
-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및 여주~원주 복선 철도 건설 조속 추진, GTX-D 원주 연장, 남북 9축 강원 양구~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추진 등으로 강원 중·남부권 교통망 확대



강원형 성장동력 발굴로 강원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강원도 미래비전에 걸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
- 강원형 역세권 개발 적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강원권 확장
- 지역산업, 창업 및 특화산업 등을 연계한 강원형 미래 대학도시 구축으로 대학에 '첨단기술 기업, R&D 센터, 도시형 스마트 공장' 등 유치

접경 및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평화시대 · 북방경제를 대비한 평화경제협력모델의 지속 발굴 및 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기폐광에 따른 '고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대체산업 육성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4계절 해양 · 산악 · 내륙관광 활성화
-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국제적 규모로 육성 지원
- 강원 고성 지역에 남북산림협력센터 추가 조성

강원형 맞춤형 복지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공영버스 노선 지속 확대로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
-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 맞춤형 의료 ·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필수의료기반 확충과 스마트 헬스케어 등 맞춤형 지원
- 출산, 보육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지역별 주요공약 11

충청북도

■ 참여형 재난대책, 실용적 저출생종합대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 오송참사 책임자처벌을 위한 입법 및 공공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도민·전문가 참여감사제도('안전충북지킴이') 구축
- 결혼·출산지원금 확대, 돌봄·양육 공공책임 강화 및 인력 확충
- 아동·청소년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북부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치

■ 미래신성장산업과 차세대 디지털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신성장수도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 및 데이터센터 등 연구데이터 활용사업 추진
- K-바이오스퀘어(KAIST 오송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 조기 조성
- 오송·오창·혁신도시·충주를 잇는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최첨단 차세대 디지털산업 육성

■ 항공·철도·도로망 확충으로 하늘길·땅길이 통하는 '新사통팔달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조기 완성, 중부내륙선 지선, 수도권내륙선 조기 추진 등 철도망 확충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 도로망 확충
- 청주국제공항 현대화 추진(화물청사, 여객청사, 활주로 확충)



■ 국가균형발전과 충청메가시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축 총복’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기여도 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정주 환경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 치과대 신설,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비수도권 이전 기업 혜택 강화 입법

■ 복지·문화 늘리고, 환경오염·생활격차 줄여서 ‘인간다운 삶이 있는 총복’을 만들겠습니다.

- 거점별 원도심 활성화 및 북부권·동남부권 문화관광휴양벨트, 미호천 등 녹지·친수공간 조성, 도내 읍면동별 복지·문화·체육복합시설 확대
- 지역자원시설세, 대형담 이익금 지역환수 등으로 총복형 복지예산 확보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

지역별 주요공약 12

충청남도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
- 지역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문화체육 등 특화기관 이전 추진

■ 공공의료 자원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 충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관광·물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예타 면제사업 선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선정)
- 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및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직접 연결



■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 국방 인공지능(AI), 로봇, 군용전지 등 국방관련 연구시설 건립
- 국방국가산단 방산기업 적극 유치 등 국방 연구 · 산업발전 생태계 구축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기금 확충 등으로 탈석탄 산업 및 일자리 전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소재, 신기술 중심 지속가능한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바이오 첨단소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농식품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임상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구축, 신소재·신기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 미래산업 육성
- 국가수소진흥기관 설립,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생명경제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 전북특별자치도! 세계가 주목하는 농생명 산업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 클러스터 구축,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으로 글로벌 K-푸드 메카 육성 및 기반구축
- 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축산ICT 클러스터 구축, 푸드테크 인증기관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농생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추진

■ 자산운용 특화금융 도시와 미래 경제의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 전북혁신도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 및 집적화로 금융도시 조성
- 기후에너지투자기관 설립,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기관 개설, RE100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으로 미래 경제의 혁신 허브 조성



■ 역사·문화·자연을 활용한 생태도시 및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ctive School, Active 전북만들기로 K-문화·체육·관광 육성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서부권 산림휴양 관광벨리 조성 국립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으로 동부권 생태도시 육성
- 국립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모아(母兒) 복합지원센터 건립,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국내외 은퇴자 이주 정착 복합단지 개발로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 새만금 주요사업 2030년 완공 및 특별한 전북 SOC 조성으로 사람이 모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 농생명·산업연구·복합개발·배후도시 등 용지조성, 새만금 잼버리부지 산업·연구용지 확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조기구축,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 새만금 농업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립 외국인 교육단지 조성 등 새만금 주요사업 지속 추진
-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김제~정읍 간 고속도로 확장,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 4차선 확장,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군산~목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권 철도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전북 SOC 기반 조성



지역별 주요공약 14

전라남도

■ 보건의료 기반 및 첨단전략산업을 확충하겠습니다.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립면역연구원 유치
-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통신 인프라 연관산업 육성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

■ AI 최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 AI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 국제 유기농 수출플랫폼 구축
- AI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 국립 수산종자원 설립 유치
- 공공기관 전남 이전 추진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 한국에너지 공대의 정상적 발전 지속적 지원
- COP33(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 서남해안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 해양 · 문화 ·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 전남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추진
-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 지원
- 조기폐광지역 경제 관광진흥사업 추진
-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추진

■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대 하겠습니다.

-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 광주~고흥(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 장항선을 목포까지 연장하여 충청~전라 간 서해안 경제협력축 건설
-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광주~나주) 추진

경상북도



■ 학교시설 평생돌봄 거점화를 통해 '경북 전 연령대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리모델링을 통한 학교시설의 평생돌봄 거점화
- 지역 전 연령대 돌봄체계 구축

■ 경북에 '거점별 스마트청년신도시' 조성과 '유학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주거 및 사무 다양성 확보, 청년공유공간 마련, 전문도서관 유치
- 유럽 유명 기술선도대학 · 지역 대학 연대 융복합 대학원 신설
- 유럽 유명 대학 분원 설치 및 한국어 학당 설치

■ 경북형 일자리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 십만개를 확보하겠습니다.

- 혁신산업 중심 '경북형 일자리' 도입
- 혁신산업벨트 일자리창출
 - 공항복합산업벨트(구미~영천~경산)
 - 물류 · 제조지원벨트(김천~칠곡)
 - 소재 · 부품 · 에너지벨트(구미~포항~경주)
 - 글로벌 백신 · 의료산업벨트(안동~대구)
- 역사 · 자연 · 6차산업벨트 일자리창출
 - 역사문화벨트(문경~안동~경주)
 - 자연친화벨트(울진~영양~영덕~포항)
 - 6차산업벨트(안동 거점, 봉화~영주~예천~상주~의성~청송)



■ 경북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물류·유통의 공공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 브랜드명, 디자인, 슬로건 등 개발
- 공공에서 물류와 유통을 책임지는 대행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 경북 내 응급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 ‘플라이 엠블런스’ 도입, 경북 전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시간 15분 이내 단축



지역별 주요공약 16

경상남도

2030년 KTX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 우주항공 중심 경남! 민주당이 합니다.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경남 수산업 위기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조사 연구
- 수산업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누구나 어디서나 걱정 없는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창원 공공의대 유치 및 지역의사제로 의료 소외지역 없는 경남
-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정상 추진
- BIG3급 부울경 대표 초대형 의료기관 유치

2000년 가야역사문화가 인류문화유산에서 지역발전 보배로 피어납니다.

- 2042년 가야 건국 2000년 맞이 장기 계획 마련
- 가야 역사 문화권 연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가야역사문화센터, 가야유적 발굴체험관 인프라 구축



■ 경남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 1시간 부울경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초광역 균형발전 경남이 선도
- 동반성장과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조선산업 지원 법제도 마련
- 진해신항,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양산 ICD(내륙컨테이너기지 · 복합화물터미널) 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 연구 중심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지원 체계 마련



지역별 주요공약 1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제주 의료서비스 향상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 지역내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 추진
- 입원환자 친환경 급식 제공

■ 제주 1차산업의 고소득 산업 전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제주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설립
-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 수산부산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 팽생이모자반 등 미이용 해조류를 활용한 사료, 탄소흡수 소재 산업단지 조성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유족 결정 간소화
-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수 감면제도 도입
-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 종교계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지원



■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 · 물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민 항공료 지원 추진
- 섬 지역 택배비 지원 확대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 컨테이너 표준화 지원 및 컨테이너 부두 확충

■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 관광산업 규제 혁신 및 관광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 중문관광단지 등 명품 생태 관광지(탄소제로 관광지)로 재구조화
- 산, 바다,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관광 인프라 조성
- 유니버설 디자인(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발행인 |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편집인 | 김민석, 이개호, 정태호

만든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301호

전화 | ☎ 02-6788-2606

발행일 | 2024년 3월 25일

디자인·인쇄 | 경성문화사 ☎ 02-786-2999